

2 0 1 5

제17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한일수교 50년 그 빛과 그림자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2 0 1 5

제17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한일수교 50년 그 빛과 그림자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제17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한일수교 50년, 그 빛과 그림자

- 주 제 : 한일수교 50년, 그 빛과 그림자
- 일 시 : 2015. 9. 18(금) ~ 11. 13(금)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 일 정

연번	날 짜	구분	강 의 주 제	강 사
1	9월 18일	강의	개관1. 역사 : 한일회담의 역사와 쟁점들	박 진 희 (국사편찬위원회)
2	9월 25일	강의	쟁점1. 독도 :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3	10월 2일	강의	개관2. 경제 : 한일회담과 경제외교	이 현 진 (국사편찬위원회)
4	10월 16일	강의	쟁점2. 문화재 : 식민지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 문제	국 성 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	10월 23일	강의	쟁점3. 재일조선인 :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운동	후지타 타다요시 (일본 중앙대학)
6	10월 30일	강의	쟁점4. 청구권 : 대일청구권자금과 포항제철의 건설	정 대 훈 (국사편찬위원회)
7	11월 6일	답사	현장답사.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8	11월 13일	강의	쟁점5.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쟁점들	박 정 애 (동국대학교)

※ 강의일정 · 주제 ·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한일회담의 역사와 쟁점들	박 진 희	07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호사카 유지	19
한일회담과 경제외교	이 현 진	31
식민지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 문제	국 성 하	41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운동	후지타 타다요시	61
대일청구권자금과 포항제철의 건설	정 대 훈	7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쟁점들	박 정 애	79

The background of the cover features decorative floral patterns. In the top right corner, there is a large, detailed illustration of a flowering branch, possibly a hibiscus, with large, multi-petaled flowers and broad leaves.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re is a cluster of smaller, five-petaled flowers, resembling cherry blossoms, with visible stamens and some falling petals. The overall design is elegant and traditional.

한일회담의 역사와 쟁점들

박진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일회담의 역사와 쟁점들

박진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한국과 일본 : 광복 70년과 패전 70년

2015년은 한국은 광복 70년, 일본은 패전 7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양국이 국교를 맺은 한일 협정 체결 5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올해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한국과 일본은 제국주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긴 했지만, ‘근대’라는 시대를 공유했다. 1945년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냉전 체제 하 미국의 영향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공유했지만, 한국의 분단과 전쟁,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로 상징되는 상이한 발전과정과 20년이라는 국교 단절의 과정을 거쳤다.

최근 일본의 아베 내각은 지난 70년 동안 일본의 내치와 외교의 골간을 이루어온 평화헌법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보유와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에 종언을 고하고, 소위 ‘보통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주변국들의 우려와 비판도 무시한 채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관계와 평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키는 행위임을 말할 것도 없다. 왜 일본은 또다시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과는 정 반대의 행보로 나가려고 하는 것일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한일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대일강화조약과 한일관계

2차 대전 종전 후 한국과 일본과 관계는 ‘對日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체결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약은 승전국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 체결한 강화조약이었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9개국이 조인하여,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책임문제를 마무리하고, 주권국가로 부활했다. 그러나 당초 대일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에게 전쟁책임을 묻는 ‘징벌조약’으로 구상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부활, 재건시키는 ‘관대한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냉전체제가 강화되자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시아의 반공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대부분 침해되거나 무시되었다. 36년간의 식민지 배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배상 요구를 전제로 한일관계 개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리한 상황 전개였다. 결국 한국은 장기간의 일본 식민지배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지만, 연합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약 체결에 참가하지 못했다.

한국이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대비해 세운 기본 방침은 연합국의 자격으로 조약 서명국이 되는 것이었다. 한국은 36년간의 식민지배 아래서도 줄기차게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항일전에 참전했으므로 마땅히 연합국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침을 토대로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서 관철시킬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재산 요구권을 포기할 것, 둘째 양국 간 어획수역을 명백히 결정할 것, 셋째 일본은 대마도·파랑도·독도에 대한 요구권을 포기할 것 등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과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했다. 그래서 1951년 10월 미국의 주선으로 일본 동경에서 한일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열렸다.

3. 1965년 한일협정 체결

1965년 6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悦三郎), 한일회담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 晉一)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정 조인식이 있었다. 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 2월 1차 한일회담부터 1965년 7차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 장장 14년을 끌어온 한일회담이 마무리되는 자리였다. 한일협정은 기본관계를 규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토대로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 협정으로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일협정 체결은 한일 양국 모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한일 간 과거사 청산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한일회담이 개시된 이래 한일관계는 항상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다. 한국인들은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잔혹성에 대해 사과 받고 배상받아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회담이 개시될 때부터 이미 상호 양보할 수 없는 현안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국은 과거 청산을 전제로 한 관계 수립을 중시한 반면, 일본은 과거사를 인정한 기반 위에서 관계 수립에 중점을 두고 교섭에 임했다. 한국은 1951년 10월 한일예비회담에서부터 이 회담을 양국 간의 일종의 강화회담·강화조약으로 생각했다.

한일관계를 패전국과 승전국, 연합국과 일본의 관계로 상정한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을 대전제로 화해와 타협을 통한 협상을 구상했다. 반면 일본은 과거사는 합법적이었으며 그 자체로 정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은 회담을 외교관계가 없는 개별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협상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양국의 과거사 인식 차이는 한일회담이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한일협정은 이 같은 양국 간 역사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체결되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내용이 알려지자 한일 양국에서는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한일협정 졸속 강행 방식에 반대하며 1964년 대대적인 한일협정 체결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1965년 협정 조인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의 한일협정반대운동은 한일 간 국교 수립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식민지배라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하였다. 한국 정부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보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경제개발자금이 중요하며 ‘실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리’의 기준과 내용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국교 수립 조약 체결문제로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을까? 아마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왜 한일협정 체결은 한국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해 정권반대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상대가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적거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간 현안문제 중 유일하게 일본 국민의 관심을 끈 것은 평화선문제였다. 불법적인 평화선으로 인해 자국민이 나포·억류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뺀다면 한일협정은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일본에서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측은 한일협정이 북동아시아의 군사동맹 결성을 목표로 한 것이며, 남북통일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소수 지식인들은 일본의 식민주의를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아시아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극히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유일한 피폭자’로서 전쟁의 체험자이자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침략자·가해자’라는 시각은 결여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평화헌법을 토대로 제어하되, 경제대국화와 그 일환으로써 역사청산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결여한 아시아에로의 대대적인 재진출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은연중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중적인 역사인식을 공유한 일본인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순적 인식과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한일협정에 대한 무관심, 왜곡된 대한 인식을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일 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1965년 8월 14일 공화당 단독으로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일본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민당의 강행으로 11월 12

일 중의원, 12월 11일 참의원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12월 18일 양국 간 한일협정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한일관계는 ‘정상화’ 되었다.

〈표 1〉 한일회담의 의제와 경과

회 차	기 간	경 과	비고
예비회담	1951.10.20~ 1952.2. 27	■ 한일회담 의제 선정 - 기본관계 - 재일교포 의 법적지위 - 어업문제 - 청구권문제 - 선박문제	
제1차 회담	1952. 2.15 ~ 4.25	■ 일본의 대한청구권(‘역청구권’ 주장으로 회담 결렬	■ 한국, 평화선 선포 (1952. 1)
제2차 회담	1953. 4. 15 ~ 7. 23	■ 휴전협정 체결(1953. 7)과 제네바회담 개최를 이유로 일본 휴회 제의	■ 이승만 대통령, 3차 일본 방문(1953. 1) -1차 1948.10 -2차 1950.2
제3차 회담	1953. 10. 6 ~ 10. 21	■ 평화선의 합법성에 대한 토의 집중 ■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 망언으로 회담 결렬	■ 구보타 망언으로 약 4년 6개월간 한일회담 중단
제4차 예비교섭	1957. 5 ~ 1957.12.31	■ 한일회담 재개 합의 - 일본, 대한청구권과 구보타 망언 취소	
제4차 회담	1958. 4. 15 ~ 960. 4.15	■ 의제 조정 - 기본관계 - 청구권문제 - 어업과 평화선문제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 - 선박반환문제 - 문화재반환문제	■ 한일 간 상호 억류자 석방, 일본은 한국 문화재 106점 반환 ■ 959. 12 일본, 재일한국인 복송 개시 ■ 4·19혁명 발발로 중단
제5차 회담	1960.10.25 ~ 1961.5.16	■ 한국, 어업문제 우선 타결하고, 청구권 문제는 국교 수립 후 타결할 것을 제의 ■ 일본, 일괄타결 주장하며 한국의 평화선 문제에 양보 주장	■ 5.16 군사정변 발발로 중단
제6차 회담	1961.10.20 ~ 1964.4.6	■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청구권 문제 정치적 타결	
제7차 회담	1964.12.3 ~ 1965.6.22	■ 정식 조약 조인	■ 1965. 12 한일 국회 조약 비준 통과

〈표 2〉 한일간 쟁점과 합의사항 ① : 한일기본관계

양국 입장 주요쟁점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한일협정문
기본입장	●양국의 과거사 청산을 기초로 새로운 관계 수립	●새로운 관계 수립	●언급 없음
합의문서형식	●조약 형식	●공동선언 형식	●조약
舊조약무효 확인문제	●구조약은 시초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조항 명기	●국교 정상화 이후 무효, 명기 불필요	●‘대한민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항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3조)
조약 명칭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우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반도유일합법 정부확인 조항	●명기 주장	●유일합법성 인정, 그러나 북한 존재 인정 필요	●유엔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인정(2조)
독도문제	●한국 고유영토이므로 명기 거부	●명기 주장	●제외
교섭경과	●제1차 회담 시 조약안 교환했으나 성과 없었음 ●1~3차 회담까지 양국은 기존 입장 고수 ●제4차 회담에서 기본관계문제는 일단 보류, 기타 현안문제 해결 후 토의 개시기로 합의함		

〈표 3〉 한일간 쟁점과 합의사항 ② : 청구권

양국 입장 주요쟁점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한일협정문
제1공화국	제1차 ~ 3차 회담	●대한청구권(역청구권) 요구 - 조선에 남기고 온 일본 인 사유재산 반환 요구	●〈한일 간의 청구권 문 제 해결 및 경제협력〉 - 제공 명분, 국교정상화 축하금, 민생 안정,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 ※ 청구권의 해결 - 한일 양국과 양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4 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 로 해결된 것으로 함
	제4차 회담	(경과) ●일본, 대한청구권과 구보타 발언 철회	
제2공화국	제5차 회담	●8개항은 법적 근거 및 사실관계 확실하므로 전 한반도의 청구권에 대한 변제 요구 ●한국정부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한 한 청구권 중 법적 근거와 증거관계가 확실한 부분 만 변제 가능	
제3공화국	제6차 ~ 7차 회담	●일본, 한국의 청구내용은 법률관계와 증거관계 불명으로 변제불가 입장 견지	
		(경과) ●1962년 김종필과 오히라 회담에서 원칙 합의, 총 6억 달러 ●1965년 이동원과 시이나 외무장관 간 회담, 민간차관 2억 달러 증액, 총 8억 달러로 최종 합의	

〈표 4〉 한일간 쟁점과 합의사항 ③ : 어업

양국 입장 주요쟁점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한일협정문
제1차~ 제3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선 선포(1952.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해양에 대한 국가 주권 선언 － 어업자원 규제 및 보호 － 보호수역 경계선 설정 및 장차 수정 기능 － 공해상의 자유항행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자유원칙에 위배 － 공해에 국가주권을 선언한 국제관례는 없음 － 독도를 평화선에 포함시킨 것은 영토 침해 	<p>(1) 어업협정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 유지 • 자원의 보호와 개발 • 공해자유의 원칙존중 • 분쟁 원인 제거 • 어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p>(2) 어업전관수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인정 • 직선기선 사용시 타방 체약국과 협의 규정
제4차 회담	<p>[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선을 둘러싼 법리 논쟁 지속 		<p>(3) 공동규제수역 설정</p> <p>(4) 어업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차관 3억 달러 중 9천만 불을 어업협력자금에 총당
제5차 회담			
제6차~ 제7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어업수역 및 공동 규제수역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독점어업수역 12해리, 외측 6해리에 대한 향후 10년간 어로권 보장 요구 	<p>(6)분쟁해결 조항 및 유효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 불능시 3인의 중재위원회에 회부 • 유효기간은 5년, 그 후는 일방 체약국이 종료의사 통고 후 1년간 효력 유지

〈표 5〉 한일간 쟁점과 합의사항 ④ :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양국 입장 주요쟁점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한일협정문
국적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적이므로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일교포는 대일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 이탈, 한국 국적 취득 ●재일교포 의 국적은 호적 기준 ●일본 국적 취득은 일본 국적법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영주권 부여 (1966.1.17.~ 1971.1.17까지 신청)
영주권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년 8월 9일 이전 거주자 확인 시 무조건 영주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령에 의거 각자 신청, 개별 심사, 2,000엔 수수료 징수 후 허가 ●선량, 자립기능, 일본 국익에 부합하는 자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45.8.15 이전 거주자 및 직계비속 ② 위 항의 직계비속 ③ ①②항의 직계비속 은 1991년 1월까지 합의
협정영주권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년에 달할 때까지 일본 거주 ●성년에 달한 후 영주허가 신청시 퇴거 강제 사유없는 한 일본 법률에 의거 영주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 중 ‘子’에 한해 영주권 부여 	
처우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 8. 9 이전부터의 거주 자 는 내국민 대우 주장 (단, 참정권, 공무담임권 제외 양해) ●최혜국민 대우는 1945.8.9 후 입국자에 적용 ●일반외국인에 금지된 권리 라도 재일교포는 10~30년 정도 특수 보호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외국인 대우(2종의 외국인 인정 불가, 단 광업권 등 기득권은 존중) ●통상항해조약 체결시 최혜 국민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혜국민 대우 ●교육, 생활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타당한 고려
강제퇴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不可 ●국민자 생활기반 확립 시까지 생활보조 계속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 강제퇴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조금 수령 포기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범죄 8년 이상 수형자 등
귀국자 재산 반출,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불가 ●밀무역, 금제품 운반시 제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무역관리령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은 종량 4천파운드 이내 － 현금은 10만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한 고려

〈표 6〉 한일간 쟁점과 합의사항 ⑤ : 문화재 반환


양국 입장 주요쟁점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한일협정문
제1차~ 제3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일청구권 8개항 중 1항으로 문화재 반환 요구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반환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 발효 6개월 이내 한국에 인도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해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 ●일본은 일본국민이 소유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도록 권장
제4차 회담	<p>[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반환문제는 청구권 문제에 포함되어 협의 ●일본, 역청구권문제로 1차 회담이 결렬되자, 일부 한국 문화재 반환 의사를 표하며 청구권 문제 상쇄를 시도 		
제5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반출 경위, 목록, 소재 등을 조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반환 원칙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 문화재 '기부' 가능 - 사유 문화재 인도 불능 - '반환'이 아닌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 따른 '기증' '인도' 	
제6차~ 제7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반환은 문화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일본은 한국문화재를 인도한다고 타협 		

4. 한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 간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책임은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 세대가 해결해야 한다. 특히 양국의 정치가와 여론 주도층은 인류가 지향해온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한일관계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식견을 가지고, 솔선하여 역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한일 간 역사문제인 독도 문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영토문제가 점점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삼국 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사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당사국간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의 작용으로 복잡해지고 첨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국의 민족주의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우파세력들까지 합세함으로써 문제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국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동아시아 3국 간 역사교류와 같은 민간교류와 경제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호조건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와 호조건을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으로 반영할 것인가이다. 두 저자는 최근 일본 내 진보적 지식인과 일반 국민들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이 너무한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일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한일협정에서 회피되고 무시된 역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간 역사인식의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올해는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협정 체결로 한일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한일관계는 현재도 역사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일협정 체결 이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적 차원에서 반전 평화, 인권 옹호라는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The background of the cover features decorative floral patterns in the corners. The top-right corner is filled with a dense, detailed illustration of large, five-petaled flowers, possibly hibiscus, with prominent stamens and leaves. The bottom-left corner contains a cluster of smaller, five-petaled flowers with dark centers, resembling cherry blossoms, on thin stems. The bottom-right corner has a single, isolated flower of the same style as the bottom-left cluster. The rest of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gray color.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교수)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교수)

2012년과 2013년 초반까지의 독도 영유권 문제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당시)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 독도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은 소위 보복조치를 속속 발표했다. 한일통화스와프 축소, 관료급 한일회담 연기 등의 조치발표에 이어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당시)는 각 성청에게 할 수 있는 보복조치 방안을 다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현재의 별로 좋지 않은 한일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쯤이었다.

일본은 독도를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하자고 공세를 높였고 노다총리의 친서를 한국 측으로 보내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용을 거부해 외교관을 시켜서 친서를 일본 측으로 돌려보냈다. 그후 일본은 외교문서를 보내와 ICJ로 공동 제소할 것과 그것이 안 되면 1965년에 정한 교환 공문방식인 조정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해 왔지만 한국정부는 양쪽 모두를 거부했다.

그러자 일본은 ICJ로 단독제소할 것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8월24일에 소위 ‘영토국회’를 열어 한일 간의 독도문제와 중일간의 센카쿠열도문제 양쪽에서 일본의 정당성을 인터넷 생중계로 세계에 어필했다.

이어진 8월27일 일본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노다총리는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독도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안부문제까지 억지 주장을 폈다.

이에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부당하게 ICJ로 단독제소한다면 한국은 위안부문제를 국제범죄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문제가 재연된 상황에 대해 일본 내 언론들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마이니치(毎日)신문 등이 “독도문제와 달리 위안부문제를 두고 한국과 대립하는 것은 일본에게 불리하다. 여성의 인권문제인 만큼 세계적으로 일본이 다시 지탄받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충고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일본정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이 서서히 한일관계를 수습해 가면서 표면적으로는 2012년의 독도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일본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후퇴하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공세에 나선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 유럽, 호주 등에 걸친 세계적 여성의 성 착취문제이므로 일본에게 절대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없는 전략적 후퇴를 정했을 뿐이다.

12월16일 일본의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3년3개월 만에 다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자민당 아베 총리는 독도에 대해 강경한 공약을 내세워 시마네현 행사인 2월 22일의 ‘다케시마(독도)

의 날'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2013년 2월 25일에 취임식을 거행하는 박근혜 차기 대통령과 마찰을 빚지 않게 공약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결정도 지극히 전략적인 태도로 풀이된다.

개헌으로 향하는 아베정권

현재 일본의 근 미래적인 외교목표 중 하나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일이다. 몇 년 전 실패한 이 목표를 일본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보리 이사국의 기본적 여건이 국제공헌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명기해 있으므로 이 내용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실시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12월16일 중의원선거 결과 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국회의원의석 480의 2/3인 320의석 이상을 얻었다. 그러므로 올(2013) 7월 하순에 실시될 참의원선거에서 개헌세력들이 여야를 막론하여 참의원국회의원 수(현재 242석)의 2/3 이상을 얻으면 이제 양원 모두가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개헌세력이 되어 개헌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50%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면 개헌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중군 위안부문제가 불거지고 다시 세계적인 수준에서 비난을 받으면 구일본군의 악행이 일본인들의 마음에 더욱 각인되어서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50%를 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국민들의 70%이상의 지지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아베총리는 위안부발언을 조심하면서도 다른 문제에 대해선 4월부터 망언을 서슴지 않게 말하기 시작했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든가 “야스쿠니신사와 미국의 알린튼 국립묘지와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든가 우파적인 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터진 위안부 문제

지난해(2012) 8월의 노다 총리의 위안부 강제성 부정 발언을 우려한 일본언론들의 경고를 받아들인 일본 노다정권은 12월말에 현 아베정권으로 바뀌었다. 아베 총리는 선거유세 중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1993년의 고노담화를 고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고노담화는 구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일본정부의 공식담화다.

그러나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아베총리는 위안부문제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고노담화를 수정한다는 공약도 강조하지 않게 되었고 “역사가들에 판단을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6년 전의 1차 아베내각에서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모집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공언해 내외에서 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시모토 토루 오사카 시장이 2013년 5월에 들어 위안부 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군대는 여성을 활용했다. 일본만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 “미누도 오키나와에서 여성폭력 등 문제가 있으니 매춘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한 사실이 없다” 등의 하시모토의 망언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성단체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에 여파로 7월에 예정되어 있던 그의 미국순회는 미국 측이 모두 취소해 그는 미국행을 단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아베총리는 하시모토 시장과 자신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으나 일본언론들은 본질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 예상을 못했던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망언이 그가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유신회의의 지지율을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고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하여 야당 제1당이 되려고 한 일본유신회의의 목표는 거의 좌절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한 개헌세력의 추락이라는 현상이므로 아베정권의 개헌 목표에도 적지 않은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나의 독도 연구

필자는 일본계 한국인이다. 2003년 한국체류 15년만에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연구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14년간 계속하고 있다. 내가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무렵 한국학생들이 일본에서 온 나에게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들로는 일본에서 온 내가 어떤 답을 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나는 그때 답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많은 일본인들처럼 나는 당시 독도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독도라는 섬이 한일간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어느 나라 땅이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독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독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했다. 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진실을 탐구하려는 마음이 강한 연구자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 주장, 한국 측 주장 등 양쪽을 대표적인 학자들의 저서나 양국정부의 주장 등을 통해 알아봤고 필요할 때는 그들이 내세운 1차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4년간의 연구 결과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는 은폐와 왜곡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 인식을 토대로 나는 자신의 독도논문으로는 처음으로 2002년 ‘독도영유권문제의 미해결문제고찰’이라는 논문을 썼다.

일본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정부도 특히 1870년과 1877년에 당시의 일본 최고 권력기관이

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부속, 일본영토 외의 섬들이라고 결정한 공문서를 은폐하거나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002년의 첫 논문에서 나는 1877년의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일본 측 은폐와 왜곡을 주로 다루었다. 2005년에는 태정관 지령문의 부도 ‘기죽도약도(Isotakeshima map)’가 일본의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되어 태정관이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킨 두 섬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사실이 보다 선명해졌다. 일본정부는 2006년과 2009년에 국회에서 있었던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래된 문서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여 확답을 피했다.

한국 측에서도 2006년 연합뉴스가 필자와 협력하여 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질의서를 일본정부와 자민당 등에 보냈으나 일본정부의 답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그후에도 그들은 계속 조사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태정관 지령문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들은 조사가 끝났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메이지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공식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조사 중이라고 답할 것이다. 모든 태정관 지령은 도중에서 그 문서를 부정한 다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견해가 일본의 판례의 주류이므로 일본정부는 태정관 지령문이 많이 알려져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일본정부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은폐와 왜곡에 급급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독도영유논리, 그 비판과 극복_1

2008년에는 북해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는 한국인들의 주장처럼 한국영토”라고 성명을 냈고, 2011년 9월에는 도쿄도 사회과 교원노조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성명을 냈다. 일본의 사회과 교사들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기재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로 독도문제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한국 측 주장까지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많은 사회과 교사들이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로서 그들이 1870년과 1877년의 태정관 지령문을 거론한다.

8월 24일 노다 총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장면은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최대의 홍보효과를 노린 국회 생중계였으나 그들의 논리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앞에서 말한 태정관 지령문은 노다 총리가 공표한 독도가 일본영토인 3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즉 일본이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는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노다 총리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좀더 설명해야 한다. 우선 17세기말인 1696년 1월 일본의 사무라이 정권 에도막부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던 돛토리번(현, 돗토리현) 영주에게 울릉도

뿐만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이때 에도막부는 ‘울릉도 외에 돛토리번과 관련이 있는 섬이 또 있으냐’라고 질문한 것이다. 즉 에도막부는 독도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도막부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에도막부에 질문에 대해 돛토리번은 “송도(松島 : 당시의 독도의 일본명)라는 섬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의 영지가 아닙니다. 울릉도에 가는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방도 이 섬을 영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이런 고문서들은 현재 돛토리 현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의 이런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달된 공문서가 1870년과 1877년의 태정관 문서인 것이다.

1870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속에서 일본 외무성은 “원록(元祿)년간(1688-1704)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라고 명기했고 17세기말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1877년 ‘공문록’ 속에서 일본 중앙정부 태정관은 “원록 5년(1692) 조선인 입도 이래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독도)의 지적편성의 건은 한일 양국의 문서왕래가 끝나 두 섬은 드디어 일본과 관계가 없는 섬이 되었다. (중략)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여 17세기말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것이 된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즉 17세기 중반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 허위이고 진실은 ‘17세기말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조선)에 있다고 인정했다’ 라는데 있다. 일본의 주장이란 어느 정도 사실로부터 시작되지만 100% 진실을 말하지 않고 도중에서 심하게 왜곡시키는 수법을 항상 사용하고 있다. 100% 진실을 추구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일본이 진실을 추구하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진정한 국익을 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국익을 위해 진실을 목살해 나가는 경향을 짙게 띠고 있다. 노다 총리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선 더 많은 반박자료가 있으나 지면의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인다.

일본이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아시아나 세계의 지도국가가 된다는 그들의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것이다. 나는 일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싶다.

일본의 독도영유논리, 그 비판과 극복_2

이제 노다 총리의 독도가 일본영토인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노다 총리는 1905년에 일본은 독도를 정식으로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이, 독도가 어떤 나

라에도 소속하지 않는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선점논리에 입각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얘기가.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은 1903년부터 2년간 오키섬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이 독도에 이주해 강치잡이를 했다는 사실을 실효지배의 근거로 하면서 만들어진 행위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1870년과 1877년의 태정관 문서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무성은 “한국영토 일 수 있는 일개의 불모의 암초를 취하므로 인해 열강들로 하여금 일본이 대한제국 전체를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여 독도편입에 반대했다. 한편 외무성은 “때가 때인 만큼 독도를 하루속히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다른 성청을 설득해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독도를 비밀스럽게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점에 먼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독도편입을 알리는 고시는 일본의 관보가 아니라 시마네현 현보에 발표되었고 지방신문이 작게 기사를 냈지만 주목한 사람들은 일본인들 중에도 거의 없었다. 바로 일본정부는 내무성의 충고를 받아들여 독도침탈의 사실을 열강들이 알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전체를 삼키기 위해 열강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1905년 8월 미국과 일본이 소위 가즈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를 미국이 묵인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하여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었다. 그때 영국도 밀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이라는 당시의 강대국 둘을 일본 편으로 만든 데 성공했다. 이어서 일본은 1905년 9월 러일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조약 체결 시, 그 강화조약 제1조에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보호국화를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성공하여 한반도문제에는 일본의 우선권을 갖는 것을 러시아 측에 인정케 만들었다. 일본은 프랑스와도 다르게 협상했고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발언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제 주요 열강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일본은 1905년 11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마음대로 한국에 강요할 수 있었다. 일본의 한국침략을 막는 열강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도편입에 대해서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진 일본은 1906년 3월 시마네현 공무원들이 울릉도에 들어서 울릉 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된 사실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때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한다”(이용래 보고서 : 독도박물관 소재)는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그럴 리가 없다. 일본인들의 행동을 주시해라”라는 지령 제3호를 강원도와 울릉군수에 하달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다.

이것이 한국이 말하는 역사적 맥락이다. 바로 독도문제는 1904년 2월 한반도에 상륙한 일본군이 그대로 한국에 남았고 한국을 위협하면서 독도와 한반도전체를 침탈해 간 역사적 문제가 근간

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다 총리는 8월24일 성명 중에 “독도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영토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침략의 역사에는 눈을 감자는 일본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다 총리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들이 요즘 발견되기 시작했었다. 예를 들면 1889년 조선과 일본은 ‘조일양국통어규칙’을 맺었고 서로의 연해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어업 세를 매기는데 합의를 했다. 이 합의에 의해 울릉도 주변으로 들어와 어업활동을 하려는 일본어선들은 부산 일본영사관에 일관적으로 어업 세를 납부했고 부산일본영사관은 거든 세금을 한국정부에 일괄적으로 납부했다. 세금을 낸 일본 배들은 허가증으로서의 감찰을 받았고 울릉도 주변에서 조업을 했다.

19세기말의 울릉도 주변에서의 일본 배들의 어업활동은 주로 전복과 우뚝가사리 등의 어패류를 채취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의 전복채취량이 적었을 때 독도까지 전복을 따러 나갔다는 공식 기록이 남아 있다. 그것이 1902년의 ‘부산영사관 보고서’다. 기타, 독도에서 전복을 딸 때 강치들이 방해했다는 사적인 일본기록도 남아있다.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채취한 전복 등을 다시 울릉도로 가져와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때 울릉도도감이 수출품에 수출세를 매긴 기록도 공식기록으로 확인된다(1899년 부산 영사관 보고서). 부산영사관 기록 등에 나온 이런 내용들은 19세기 후반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업 세와 수출세라는 세금정책으로 실효적으로 지배 했다는 증거가 된다. 세금징수행위가 바로 주권행사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독도에 대해 세금정책을 실시하는 ‘한국’이라는 주인을 갖고 있었으므로 무주지가 아니었다. 바로 일본의 1905년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독도영유논리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고종황제자체가 일본에게 직접적인 어떤 항의도 못해 1907년 3월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 고종의 그런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 일본정부가 1907년 7월 고종을 퇴위시켰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 한국을 그야말로 침략하는 과정에 일어났으므로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편입은 일본의 침략 사실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카이로 선언에 입각해 분명히 무효인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두 번째 논리는 극복된 셈이다.

일본의 독도영유논리, 그 비판과 극복_3

사실 여기까지로 일본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해 있는가를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세 번째 논리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45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기초 과정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고 51년 7월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조항에 기재해

줄 것을 미국무성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선포해 현재까지 독도를 불법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발언이야말로 ‘한국에 의한 독도불법점거론’의 본질을 말하고 있으니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일본이 여기서도 크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즉 미국의 견해가 마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조인국이었던 모든 연합국들의 의견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당시 미국은 전략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1949년 12월 일본에 있던 미국무성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는 ‘1905년 이래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 하에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면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무성을 설득했다. 그후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한때 공산화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을 보고 미국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망명처까지 고려할 정도가 되었다.

이때쯤 미국은 미국의 국익과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만의 견해였고 다른 연합국들, 특히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해 미국과 대립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 조약문 속의 ‘한국영토조항’에서 독도의 명칭이 사라진 것은 이런 연합국들의 독도를 둘러싼 대립을 절충하는 의미가 있었다.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은 독도가 한국영토로도 일본영토로도 기재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 사실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

독도는 1946년에 연합국에 의해 한국영토로 계획되었다(SCAPIN 677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1946년의 사실을 부정하는 어떤 조항도 없기 때문에 금반언(禁反言)의 국제법 법칙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51년 7월 19일 한국정부는 미국소재 한국대사관의 양유찬대사를 시켜 ‘독도명칭을 한국영토조항에 삽입해 줄 것을 미국무성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미국무성은 이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1951년 8월 10일자로 공식문서 ‘러스크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송부했다. ‘러스크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중략)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 섬 관할 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바로 독도는 사실상 일본영토라는 취지의 문서가 공식문서로 하여 대한민국 주미대사관으로 발송된 것이다. 일본은 이 문서야말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 이 문서는 연합국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만 보내진 비밀

문서였다는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벤 플리트 대사의 극비문서인 귀국보고서(1953.8)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즉 러스크서한은 대한민국에만 비밀리에 통보되었고 다른 연합국에는 공표가 안 된 문서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연합국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될 수 없다. 즉 ‘러스크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으로서는 무효인 셈이다. 어디까지나 미국의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책임자였던 텔러스대사가 1953년에 미국무장관이 되었는데 그는 비밀문서에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서명국들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즉 이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견해가 미국의 견해일 뿐이며 오히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견해가 많았다는 것을 당시의 책임대사였던 텔러스가 스스로 인정한 글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러스크 서한’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왜곡된 의견이고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시의 미국 측 조약책임자까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러스크 서한’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일본 측 주장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일본의 논리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자체가 무효인 사실로 인해 그 논리도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여 이승만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선포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조약 상 독도는 일본영토니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연합국은 하나도 없었다.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이 독도를 계속 지배해 왔기 때문에 연합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연합국들이 아직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3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묵인했다. 이승만평화선자체는 독도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 이승만평화선의 주목적은 일본 선박에 의한 동해 점령을 막는데 있었고 어업문제가 주된 규제대상이었다.

이승만평화선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포되었다는 식의 일본 측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다.

당시 아직 한일간의 조약이 없었으므로 무법인 바다 위에서 힘에 논리로 일본이 한국 측 어장을 휩쓸 것을 우려한 한국 측의 정당방위 선언이 한국의 해양주권선언이었고 이승만평화선 선포였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일본에게 바란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의한 독도불법점거’라는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조어를 만들어내고 현재의 한일 간 독도 갈등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냉정하게 움직이지만 한국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주장도 왜곡된 견해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 국민들을 선동하여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 측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일본 측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도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며 독도문제를 ICJ로 제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은 근대화,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팽창시기에 아시아인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일본군의 전쟁수행을 위해 전쟁터, 탄광 등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다. 일부는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잔혹한 것은 아시아의 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 모성과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실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태국,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이 군대위안부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치욕 속에서 일본군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생을 유린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양심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에게 사죄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러한 사죄는 각료들의 신사참배, 그리고 기존 정책 및 방침의 반복, 진정성이 결여된 태도 등으로 인해 주변국들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진정성이 결여된 “악어의 눈물”을 믿을 사람은 없으며 형식적인 걸 치레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을 뿐이다.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가진 일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그간 북한 핵문제,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번영확보, 기후변화, 금융위기 대응 등 제반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다. 앞으로도 그러한 협력은 계속 될 것이다.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해 세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적인 과거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the cover features decorative floral patterns. In the top right corner, there is a large, detailed illustration of a cluster of flowers, possibly peonies, with many layers of petals and prominent stamens.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re is a cluster of smaller, five-petaled flowers, likely cherry blossoms, with dark centers and some buds. The overall design is elegant and traditional, typical of Korean book covers.

한일회담과 경제외교

이 현 진(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일회담과 경제외교

이 현 진(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산업화 전략의 변화와 경제외교의 필요성 증대

●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원조의존형 구조로 정착. 원조와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자원 배분 과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 저율의 조세정책,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적자재정, 저금리정책 및 무분별한 신용의 팽창으로 특징지어짐. 재정적자가 정부 지출의 약 53%. 1950년대 후반 원조의 감소로 국가수입의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내자동원 노력 강화. 증세의 대부분이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증가라는 직접세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환특별세와 교육세 등 임시세와 물품세, 관세 등의 간접세 수입의 증대에 기인.

● 1950년대 후반 한국 산업화의 위기는 과잉시설의 존재와 가동률 저하현상으로 나타나게 됨. 과잉시설의 문제는 방직산업과 식품가공산업, 즉 당시 산업화를 주도했던 노동집약적인 비내구성 소비재 산업에서 가장 심각함. 여기에 더하여 환율 유지를 위한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저곡가정책을 유지했고, 미공법 480조에 의한 미잉여농산물의 초과도입은 농업의 피폐화를 초래. 이러한 농업의 빈곤화는 결국 구매력의 상실, 즉 내수시장의 협소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내수시장의 한계에 직면한 기업가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고, 이는 수출의 증가세로 나타남. 1963년 제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4배의 급속한 신장률 보여줌. 1966년에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외환수입의 주요 원천이 됨. 수출지향산업화의 가능성 입증되면서 국가 산업화의 기본방향 전환.

● 또한 천연자원의 수출에 의한 외환수입의 증가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조와는 달리 상환의 부담을 갖는 외자의 도입은 종래 내수시장을 겨냥했던 경공업제품의 수출과 그에 따른 수입증가라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킬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됨. 외자의 도입을 위하여 경제의 기본 방향 수정은 불가피하게 됨.

● 원조의 격감 및 국가의 재정, 금융위기 심화에 따라 국가는 산업화를 위한 재원조달의 대안적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상환의 부담을 갖는 외자의 도입은 경제의 국제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외자도입정책으로 나타났고, 외자 도입을 위한 경제외교의 시작이 됨

- 1962년과 63년에 걸친 흉작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고, 인플레이션의 양등, 식량부족 및 외환보유고의 격감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외부 압력에 대단히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의 확보와 함께 가시적인 경제성과의 달성은 정권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로 등장하게 됨.

- 195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수출지향의 문제는 외자도입이라는 조건과 결부되어 진행되어 왔음. 이는 당시 정부의 경제외교의 방향이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것에 맞추어지게 하는 요소가 됨.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차관의 지속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것과 한일국교정상화를 마무리하고 일본으로부터 자본도입을 촉진하는 외교적 노력이 전개되는 것.

2. 한일회담과 한일경제협력의 추진방향

1) 한일회담과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미국은 1960년대 초 한국을 설득하고, 한일회담의 타결을 촉구. 1961년 5월 박정희·존슨회담에서 존슨대통령은 “한일국교 수립은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진보에 의미있는 공헌을 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한군사경제원조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해줌.

- 미국은 한일국교수립으로 한국이 확보하게 될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많은 의미 부여
 - “한국 정부는 회담타결과 함께 아마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게 될 경제원조를 한국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한일회담 타결 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5년 전에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면 이미 5년 동안의 중요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앞으로 타결을 더 연기시킨다는 것은,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1964년 4월 미국무장관의 발언)”

2) 일본의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입장

- 일본 재계는 한일회담이 타결되기 이전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분석과 정책 방안 준비.
 - 일본경제조사협의회는 1964년 1월 한국경제의 실정이라는 제목 하의 조사 보고서 발표. 여기서 1960년부터 급격히 성장하는 무역량을 지적하면서 향후 한국으로서는 대일의존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화학 제품의 주요 시장으로 점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한국주재 일본 상사들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행해질 시장개척과 교역업무의 기반구축, 대한투자 등을 의욕적으로 준비.

● 일본의 대한경제협력정책(1965.4. 외무성 경제협력국 작성)

- “ 1.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의 위치

(1) 일본에게 한국의 의의는 먼저 안정보장의 면을 포함한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는 우리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또 북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번영은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한국의 의의를 통해 볼 때 우리로서는 한국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원조를 행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경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일찍이 우리 경제와 상호 보완관계로서 육성되어 왔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곤란한 이유는 첫째 종전에 의해 급격하게 양자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특히 일본인 사업자가 귀환한 후 이것을 인계할 사업경영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넓게 자본 기술면에서 일본의 협력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발전 상에 타국의 원조에 보태어 효과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구조적인 곤란함에 기초해서 말해, 일한무역이 우리가 큰 수출 초과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한국측의 불만은 커서 우리로서는 한국 측의 불만을 완화시킨 후 무역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원조를 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3. 대한경제협력의 구체적 시책 방향

(중략)

- 국교정상화에 수반하여 대한경제협력의 실시에 대해 관계 각성, 재계 및 학식경험자들을 모아 일한경제협력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경우 구체적 실시방법을 검토한다. 현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 무상본 3억 달러에 대해 한국 측의 희망에 따라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측으로서는 서울, 부산 등의 슬럼가를 일소하는 주택건설, 사회후생시설의 공여라고 하는 인프라의 정비, 민간베이스의 차관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어민용 자재 및 각종 원재료의 공여, 농업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기재 공여 등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계획한다. 또 2억 달러의 장기저리차관은 철도, 댐, 발전소, 제철소, 비료공장 등의 건설을 하는데 한국경제의 안정화, 고용증대 및 수출 촉진에 기여할 기반산업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 활용할 계획.”

3) 한일분업관계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의 보고내용

- “우선 한국 측은 노동집약적 공업을 진흥하여 일본에서 사양화되고 있는 부문을 양수하는 방향에서 이를 단기간에 원활히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위탁 가공방식을 가급적 많은 상품에 채용한

다. 위탁가공에 의하여 국제수지의 부담을 절약하면서 기술습득, 품질향상, 관료의 확보를 기한다. 섬유품, 잡제품류는 이 방법에 의하여 머지않아 한국브랜드로서 일본 국내는 물론, 제3국에도 활발한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계공업 화학공업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이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부품생산, 혹은 하청가공 조립생산의 단계에 그치지 않을 수 없을 것. 물론 중화학부문에 있어서는 완성품의 형태로 어느 때든 양국에서 분담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비교생산비의 점에서 보아 이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 한일 양국간의 다양한 경제외교채널들을 활용. 한국 산업화의 방향 및 한일경제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들이 교환됨.

3. 한일협정체결 이후 대일 경제외교채널의 변화양상

1) 정기각료회의를 통한 정부차원의 대일경제외교

-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논의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교섭으로 시작되어 정기각료회의라는 정기적인 모임으로 확대. 특히 국교정상화 이후는 2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시기였고, 한국 정부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정부 채널의 경제협력논의는 2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라는 차원에서 차관 증액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됨. 그러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앞세우는 일본 정부의 신중한 태도 때문에 정기각료회의의 초기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음.

● 정기각료회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중략)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인의 사고에서 상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 한국은 지금 국가와 국민의 모든 힘을 기울여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모든 대외 대내적 경제정치활동은 2차 5개년 계획 성패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5개년 계획을 3년 반에 완수할 것입니다. 그 방법과 가능성과 특히 대외자원 여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기간에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자신과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한국의 공업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 농촌의 부흥, 중소기업의 발전, 전반적인 국민 구매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2차 5개년 계획의 진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는 바입니다.”(장기영 부총리 인사말)

- 정기각료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조기 완수를 위해 일본의 승인 지연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청구권 자금 도입계획을 촉진시키고, 일본의 민간 차관을 증액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를 각료회의를 통해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그러나 일본 측은 본 각료회의를 인적교류와 경제교류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고, 민간 차관의 증

액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추세를 관찰하고, 업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움. 이는 한일경제협력에 있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 오히려 일본 측이 본 회의를 통해 주력한 것은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 상사의 과세문제였고, 이를 위한 조세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하려고 함.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기본 방침은 한국 경제의 추세와 일본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며 경제협력의 기본은 재한일본상사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부과와 과세원칙을 위한 조세협정의 조기 체결에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일본은 공업소유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등 일본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1960년대 후반이후에는 한국의 정치상황의 변화, 한반도의 안보위기 및 지역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한일경제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정치적인 타협 속에 경제문제가 논의되는 양상을 띠. 그리고 이러한 한일경제협력논의의 특징은 다른 경제협력회의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됨. 또한 한일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한국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자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자도입 정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한일경제협력체제가 정기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2) 민간차원의 대일경제협력논의

- 1966년에는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민간경제교류의 연장선에서 합동경제위원회라는 민간 베이스의 한일경제협력논의구조가 탄생하는데 이 기구는 정부 채널의 경제협력논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 국교정상화 이후 민간경제회의는 국교정상화 이전의 개별적인 교류가 정례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 간 논의를 촉진하거나 정부 베이스의 경제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또한 이 시기 민간베이스의 경제협력논의는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진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예비회담을 개최한다든지 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형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음

- 1969년 2월 한일 양국의 정재계 유력인사들을 규합하여 설치된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의 강화라는 취지를 실현하고 정부 채널의 협력논의를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간베이스의 경제협력기구로 등장. 그러나 협력위원회 주요 참여세력들을 보면 이들은 정계, 재계, 관계의 유력인사들로서 반관합작의 성격을 띤 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협력위원회는 한일협정의 체결 당시 비공식라인으로 기능하였던 일본의 정계, 재계, 관계의 유력인사들을 포함하는 구조로, 한일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친 비공식라인이 한일협력위원회라는 틀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협력위원회의 등장은 지역안보의 필요성에 따른 한일협력의 강화라는 조건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임

※ 한일협력위원회 한·일 양국 상임위원 및 고문 명단

한국 측 명단		
구분	성명	소속
고문	김성곤	국회의원, 동양통신사장, 민주공화당재정위원장
	윤치영	국회의원, 민주공화당외장서리, 전 국회부의장
	이 활	한국무역협회장
	이효상	국회의장
	최두선	대한적십자사총재, 전 국무총리
	홍재선	한국개발금융회사 회장
회장	백두진	국회의원, 元국무총리
부회장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 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
사무총장	김주인	국회의원, 민주공화당정책위의장
정치부위원장	백남익	국회의원, 민주공화당정책위의장
경제부위원장	홍성하	금융통화운영위원, 저축추진위 회장
문화부위원장	이선근	영남대학교 총장, 전 문교부장관
상임위원	김용완	경성방적회사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영휘	한국산업은행총재
	김상영	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
	박두병	대한상의회장, 합동통신사 회장
	박병배	국회의원, 신민당 충남도지부위원장, 元국방부차관
	송인상	한국경제개발협회 회장, 전 재무부장관
	신현확	쌍용양회 사장, 전 부흥부 장관
	이동원	국회의원, 전 외무부장관
	이홍직	고려대 교수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 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
일본 측 명단		
구분	성명	소속
고문	足立 正	전 일본동경상공회의소 회두, 동경방송회장
	石井光次郎	전 중의원 의장, 중의원 의원
	石坂 泰三	경제단체연합회명예회장, 만국박람회회장
	重宗 雄三	참의원 의원장
	安川第五郎	안전전기제작소 회장
회장	岸 信介	전 수상, 중의원 의원
사무총장	田中 龍夫	중의원 의원

정치부위원장	船田中	중의원 의장
경제부위원장	野田 卯一	중의원 의원
문화부위원장	上村健太郎	일본과학진흥재단부회장
상임위원	芦原 義重	관서전력사장, 관서경제연합회 회장
	植村甲午郎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木内 信胤	세계경제조사회이사장
	土井 正治	주우화학공업회장, 경제단체연합회부회장
	永野 重雄	신일본제철사장, 일본동경상공회의소회두
	藤野忠次郎	삼릉상사 사장
	水上 達三	삼정물산 사장
	矢次 一夫	재단법인국책연구회 상임이사

※ 자료 : 「양국위원 및 고문 명단」, 『한·일협력위원회 총회, 제1차. 동경, 1969.2.12-15』, 한국정부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3016, 프레임번호 71-80

● 한편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체제에서 주목할 점은 한일경제협력기구들의 성과여부가 일본 경제계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일본 경제계의 대중국 진출과 더불어 대한경제협력 의욕이 저하되는 과정은 한일경제협력기구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대일의존도가 높았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임.

3) 대외 경제협력 논의에서 드러나는 한국적 특수성.

● 대외경제관계의 형성에서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은 항상 함께 연동됨. 반공의 보루, 반공의 선두에 서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보장 약속받으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대외경제관계의 형성에서 항상 제기됨.

● 1960년대 한일경제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음. 특히 베트남 전쟁과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이라는 아시아 지역의 정세변화는 1960년대 후반 한일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됨. 특히 북한의 무력침투에 의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이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한미 간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고 이를 통해 발생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동요의 틈바구니에서 한일관계는 정치 경제면에서 보다 더 긴밀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게 됨. 한국 측은 한국의 번영과 안정이 일본의 번영과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운명공동체의 논리를 펼치면서 일본 정부의 경제협력을 강조했고, 일본은 아시아의 안정 보장을 위해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안보체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



식민지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 문제

—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을 중심으로 —

국 성 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식민지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 문제*

－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을 중심으로 －

국 성 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1. 머리말

2000년 5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측이 청구권 소멸을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외교통상부에 한일협정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하였다. 외교통상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2월에는 문서공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 1월 17일에 한일협정문서 일부를 공개하였고, 같은 해 8월 26일에는 한일회담에 관한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하기에 이른다.¹⁾ 문서공개에 따라 청구권 협상뿐만 아니라, 청구권과 같이 논의되기 시작한 문화재 반환협상 등의 모든 내용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등의 내용만을 가지고 문화재 반환협상을 비판했던 단계를 넘어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우리 문화재 반환경위의 소상한 파악이 가능해 졌다.²⁾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문화재가 1905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수없이 일본으로 반출된 것은 자명하다. 1905년 경 일제의 조선침략과 함께 일본 골동상과 도굴꾼들이 개성일대로 와서 왕릉을 포함한 수많은 고분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사실,³⁾ 1908년을 전후에서 경성에서는 고려시대 고분으로부터 출토된 다수의 도자기, 금속공예품을 매매된 사실,⁴⁾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적조사라는 미명아래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속에서 나온 유물들을 수집·조사·정리한 사실 등은⁵⁾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문화재가 일본에 반출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⁶⁾

광복과 함께 문화재 반환은 시작되었다. 먼저, 국립박물관은 1945년 12월에 일인 소유 고서

* 이 글은 강의를 위해 아래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본 연구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을 밝힙니다.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369-393쪽”

1) 『동아일보』, 2005. 1. 17, 「문서 공개되기까지」; 2005. 8. 26, 「교섭에서 조인까지」.

2) 夫琬琳, 「韓日協定은 批准・同意될 수 없다」, 『思想界』, 1965. 8, 72-73쪽, 참조.

3) 이구열, 『한국문화재수난사』, 돌베개, 1996, 62쪽

4) 李王職, 『李王家美術館要覽』, 1938, 1-2面.

5)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總督府, 『朝鮮』 1931. 12., 90-100面.

6) 황수영은 이러한 일제강점기 문화재 피해를 총망라하여 문화재 피해자료를 편찬한다(황수영, 『日帝期文化財被害資料』, 한국미술사, 1973, 참조).

적, 잡지류 1,068점 등을 접수하였고,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은 부산 등지에서 2,623점의 미술품을 접수하였다.⁷⁾ 이렇게 적산인수의 형태로 접수한 문화재는 국립박물관 약4,520점, 경주분관 1,486점, 공주분관 102점, 대구시립박물관 275점 이었다.⁸⁾ 적산인수는 한국 내에 있었던 문화재만이 해당되었기에 일본으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과는 무관했다. 1945년 진단학회는 일본에 약탈당한 도서의 반환을 미군정청을 통해 연합군총사령부(GHQ)에 제의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에 일본인이 약탈한 도서 및 보물목록을 완성하여 군정청에 제출한다.⁹⁾ 또한 한국정부는 1949년 대일 강화준비의 일환으로 기획처 산하에 대일배상 청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청구 자료를 수집하고,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완성했다. 그 내용은 1949년 3월 1일 현재 판명된 현물피해, 곧 지금(地金), 지은(地銀,) 서적, 미술품 및 골동품, 선박, 지도원판 등 일본에 반환을 요구할 현물의 목록이었다. 정부는 1949년 이 조서를 동경의 연합군총사령부에 보냈고, 사령부는 장래에 한일 간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한다.¹⁰⁾ 이후 문화재 반환문제는 1951년부터 1965년의 제1~7차에 걸친 한일회담에서 논의되었고, 1966년 반환 후 “반환문화재 특별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된다.¹¹⁾

어떠한 문화재가 반환되었나 하는 자료는 조약 181호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어떠한 경위를 거쳐 문화재가 반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는 불충분했다.¹²⁾ 다행히도,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전체 문서의 공개는 반환과정 전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화재 반환협상을 3시기(제1~3차, 제4~6차, 제7차 이후¹³⁾)로 나누어 고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제1~3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제1~3차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에서부터 1953년 10월까지 실시되었는데, 문화재 반환협상은 재산 및 청구권문제 내에서 논의되었다. 제1차 한일회담 때에는 8개항의 청구요강 중에서 제1

7) 『館報』第一號, 1947. 2., 6-14쪽.

8)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그래픽네트, 2005, 40쪽.

9) 이 목록은 한국의 대일배상심의회가 제출한 ‘대일배상요구조서’ 제1권에도 포함되었는데, 서적이 212조, 미술품 및 골동품이 837종에 달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 중에 소실되었다(조부근,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민속원, 2004, 305-306쪽.).

10)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2쪽.

11) 황수영, 『불교신문』, 12.15, 『한일문화재 반환협정』2002 ;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237쪽(이때에 국립박물관은 경운궁 석조전에 위치하였다).

12) 문화재반환협상은 조부근(조부근, 앞의 책 참조), 이원덕(이원덕, 앞의 책 참조), 황수영(황수영, 앞의 글 참조) 등의 글에서 언급되었지만, 협의과정 자체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13) 문화재 반환협상을 “제1~3차, 제4~6차, 제7차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3차 한일회담기의 문화재 반환협상은 재산 및 청구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둘째, 제4~6차 한일회담기 때부터 문화재 반환협상이 문화재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제5차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셋째, 제7차와 그 이후는 논의된 문화재 협의가 최종 결정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반환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일회담기 문화재반환협상을 위의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항으로 문화재 류의 반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곧 “韓國으로부터 가져온 古書籍, 美術品, 骨董品 其他 國寶 地圖原版 및 地金과 地銀을 盤還할 것”¹⁴⁾이 바로 그 내용인데, 고서적, 고미술, 골동품 등의 문화재가 반환되어야 하는 중요한 현물로 인식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한국정부에서 1949년에 조사한 청구권과 관련된 조사청구서가 “제1부, 현물반환요구 등, 제2부, 확정채권요구 등,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요구 등, 제4부, 일본정부의 저가수탈에 의한 손해 등”으로 작성되었던 것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제2차 한일회담 때부터는 청구권 제1항을 기초로 문화재 청구권은 다른 청구권과 동시에 논의되었고, 토의사항에 따라서는 축소위원회를 두어 비공식회의를 열 수 있게 하였다.¹⁶⁾ 청구권 위원회 회의 때에는 한국국보 역사적 기념물(미술공예품, 고서적 기타) 중 즉시 반환요구에 관한 목록을 넘겨주었는데, 일본측의 우에다(上田)는 문화재는 일본인에게 소유령과 닮은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반환 방법 등은 아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비공식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구체적 처리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처리 방법과 동시에 토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¹⁷⁾ 일본측은 구체적인 목록이 제시되자 자국민들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유물의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다. 다만 일본측은 이 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담당 사무관을 전임으로 하고 문화재 위원의 협조를 얻어 실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¹⁸⁾

제3차 한일회담 때부터는 문화재 반환의 원칙을 논의하고자 했다. 청구권 대상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 일본측에 문화재 관련 조사를 청구하였지만, 일본측은 성의있는 대답을 하지 않았기에 반환의 원칙을 토의하는 것이 선결문제라는 인식을 한 것이다. 곧 사실 확정의 근거가 될 반환의 원칙을 토의·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 반환 세부사항을 확인하자는 것이었다.¹⁹⁾ 그렇지만, 이러한 원칙설정도 일본의 강제점령은 한국인에게 유익하였다는 등의 구보다(久保田)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망언으로 야기된 한일회담 결렬로 무산되었다.²⁰⁾

14) 『韓國의 對日請求要綱案』, 『제1차 한일회담(1952, 2.15~4.21) 청구권 관계자료』.

15) 『對日會談 財産權 및 請求權問題』, 앞의 자료집(일본 요시다(吉田) 정권은 이 청구요강에 따라 한국측의 대일청구권에 대항하는 형태로 역청구권을 주장했다. 곧 한국이 일본에 청구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일본도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일본측으로서는 역청구권에 주장에 대하여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현안해결 지언이 일본에게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역청구권 주장의 이면에는 일본의 국내 정치상의 사정에 대한 배려도 있다. 곧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거주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일본정부로서는 이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원덕, 앞의 책, 51-58쪽)).

16) 『제1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2차 한일회담(1953, 4.15~7.23) 청구권위원회 회의록(제1~3차)』.

17) 『제2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앞의 회의록.

18) 『제3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앞의 회의록.

19) 『제1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청구권위원회 회의록(제1~2차)』.

20) 이원덕, 앞의 책, 67쪽.

3. 제4~6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제4~6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에서 1964년 4월까지 실시되었다. 문화재 반환문제는 제4차의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만 있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제5~6차에는 비공식적 의사소통 기구인 전문가위원회의 활동과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본격적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각 시기별로 주요한 협상사항을 고찰해 보겠다.

1) 제4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일본은 1958년 4월에 제4차 한일회담 시작과 함께 금제이식(金製耳飾) 등 106점의 우리 문화재를 반환한다.²¹⁾ 이 문화재 반환은 1952년 이후 결렬되었던 한일회담의 재개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반환문화재는 같은 해 7월까지도 미발표되다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 문화재 목록이 제출된 직후 발표된다. 황수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에 속하는 고분 1기(昌寧郡 校洞)로부터 1918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발굴된 것으로, 유물의 총량이나 규모도 작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학술보고서도 나온 것으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므로 문화재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했다.²²⁾ 그렇지만, 이 문화재 반환은 그 원칙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어난 이 문화재 반환은 그 원칙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어난 일로 이후의 반환협상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일본측은 이 문화재를 반환하면서 “반환(返還)”이라는 용어대신 “인도(引渡)”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후 일본의 문화재 반환원칙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한국측은 제4차 한일회담에 앞서 반환받아야 할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조사에 따라 「피탈문화재 중 일부 설명서」(1958. 1. 21),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에 인도해야하는 미술품 목록」(1958. 2), 「동경국립박물관 소재 미술품 97점의 목록」, 「한국채신부문화재대일현물반환요구품 목록」(1958. 2.28), 「한국출토 미술품 목록」 등이 정리된다. 이러한 목록을 종합하여 제4차 한일회담부터 시작되는 문화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었다.²³⁾ 그러나 제4차 한일회담에서는 한국측의 이러한 생각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제1차에서 12차까지 개최된 문화재 소위원회에서 반환문화재의 목록 논의는 고사하고, 반환의 원칙조차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측이 시종일관 언급했던 내용은 “문화재 반환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다(제1차), 일본의 내정문제가 있어, 문화재 문제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제10차), 일본의 기본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문화재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제11차), 조만간에

21) 106점의 문화재가 반환된 것은 1967년이라는 내용도 있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그라픽네트, 2005, 48쪽). 그러나 이 문화재가 1958년 4월에 반환되었다는 문화재관리국의 보고내용에 따라 1958년에 반환되었다고 정리한다(文化財管理局, 『韓日會談文化財關係參考集』, 1965, 8).

22) 「문화재 반환교섭」, 『제4차 한일회담(1958. 4.15~1960. 4.19)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23) 「문화재 반환교섭」, 앞의 회의록.

기본원칙이 정해질 것이다(제12차)” 등 문화재 반환협상을 회피하는 내용들뿐이었고,²⁴⁾ 결국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2) 제5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1960년 11월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시작되면서, 한국측은 문화재는 그 원산국에서 보존해서 이를 연구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천명하면서, 문화재 반환문제에 일본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문화재의 주무당국은 일본 문부성인데, 이 부처에서 문화재 반환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본 문화재 소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본방침을 정하기도 실제로는 어렵다고 말한다.²⁵⁾ 제4차 회담부터 시작된 문화재반환협상 지연작전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일본측은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에서 시간을 끌던 문화재 반환문제의 원칙을 제시한다. 문화재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이후, 일본측 문화재 반환의 핵심원칙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다.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기부한다는 뜻이다.

둘째,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셋째,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²⁶⁾

곧 문화재반환은 사유문화재를 제외한 국유문화재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측에 기부하는 것이고, 이는 문화협력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반환은 반환이지 다른 것은 될 수 없고, 일본 정부는 국유 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리권 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사유문화재에 관하여는 복잡한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더 토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려했다. 일본측의 원칙이 정해지고 한국측과 반환문제에서의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이 원칙이 일본측으로부터 전해진 후에, 한일 양측은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하였다. 한국측은 문화재의 반출경위,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불법반출된 문화재인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재일 한국 문화재의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하면서 그 소재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일본정부에서 지정한 한국 문화재,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한국문화재, 소위 통감 또는 총독에 의하여 반출된 한국 문화재 등은 이 논의의 중심이었다.²⁷⁾

24) 제1~12차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앞의 회의록.

25) 「1차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1960, 11~1961, 5) 예비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보고』.

26)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 앞의 회의록.

27) 「전문가회의」, 앞의 회의록. 한국정부는 대일본환청구 문화재 목록을 제5차 한일회담이 열리기 전인 1960년 6월에 완성하였다

3) 제6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제5차 한일회담부터 시작된 전문가회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구속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회의에서 얻어진 확인사항은 문화재소위원회의 검토와 인정을 거쳐야지만 협상의 효력이 있었다. 그래서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은 문화재 문제는 정치·경제문제와의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측의 전문가들이 회담에 정식 대표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회담과 별도로 전문지식의 교환을 위한 것이라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결국 일본측의 응답대로 전문가 회의는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전문가 회의에서 사실 확인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키고, 사실 확인이 되면 공식회의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본회의에 넘김으로서 양측 수석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²⁸⁾ 전문가회의는 한국측이 반환을 청구하게 될 7개 항목의 세부검토를 주로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회의에서의 사실 확인²⁹⁾

한국측이 조사를 요청한 문화재	일본측 조사결과
소네본(曾禰本)	전후 혼란으로 분실되어 소재불명이며 목록도 없음
데라우찌문고(寺内文庫)	아마구찌(山口) 현립단기여자대학에 보관되어 있음
통감본(統監本)	보관되어 있으나 목록은 모르겠음
가와이(河合) 장서	조사중임
오구라(小倉) 박물관	문화재 보호위원회의 감독하에 있고, 1002점이 등록
이찌다(市田) 소장품	모르겠음
석굴암 불상, 소석탑, 불국사 다보탑	행방을 알 수 없고, 일본 반입도 확인할 수 없음
지도원판	전란 및 미군의 압수로 없어짐
체신문화재	체신박물관에 보관됨

곧 한국측이 반환받아야 하는 중요 문화재의 조사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일본측이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소재처를 파악한 후에 한국측은 일본정부의 중요미술품 등의 반환을 전문가 회의에서도 요구하였는데, 일본측 전문가들은 “한국에 이런 종류의 전세품(傳世品)

(大韓民國政府, 『對日請求韓國藝術品(KOREA ART OBJECTS) 目錄』, 19060).

28) 「제1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1961~1962)」.

29) 「제1차 전문가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전문가 회의 (1961)」.

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음, 반환요구 한계인 1905년의 근거를 잘 모르겠음, 도굴이 반드시 일본인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³⁰⁾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 대답을 회피하였다.

전문가회의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토대로, 문화재 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은 먼저 문화재 반환의 이유를 주장한다. 곧 “대부분이 분묘, 기타 유적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것들은 불법으로 발굴되어 입수된 것인바 〈중략〉 마땅히 성질상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물건인데 이것이 귀국으로 반출되어 귀국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다. 출토와 입수 반출된 경위가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또 그 물품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이 있는데, 우리는 그 현물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³¹⁾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한국에서부터 반출된 문화재임과 그 문화재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유물들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한국측이 청구하는 문화재에 관하여 우리측이 국제법상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화란이 문화재를 돌려 준 예는 있으나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 미얀마, 실론,³²⁾ 파키스탄의 경우는 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일본측으로서는 이 문제를 권리 의무관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한일간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에 대하여 문화적인 협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기증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³³⁾

곧 일본측은 한국측이 청구하는 문화재를 국제법상으로도 돌려줄 의무가 없고, 한국이 청구할 권리도 없음을 주장하면서, 단지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발적 기증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언급한 것이었다. 한일 양측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원론적인 이견이 있지는 했지만, 문화재 소위원회에서는 1~7항에 걸친 문화재 반환목록을 검토해 나간다.

문화재 반환목록의 검토는 “제1항, 일본에서 국보 또는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제2항, 소위 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제3항, 소위 통감, 총독 등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제4항, 경상남북도에 있는 분묘 또는 기타유적으로부터 출토된 것, 제5항, 고려시대의 분묘 및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것, 제6항, 특수 권력의 배경 하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전적, 미술품(서화), 제7항, 개인의 수집품”의 순서로 이루어졌다.³⁴⁾ 이러한 문화재 반환목록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일본측은 일본측의 견해를 표명한다. 이 견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제1차 전문가회의 회의록」, 앞의 회의록.

31)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32) 실론은 현재의 스리랑카이다.

33)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34)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제3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제4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첫째, 한국측은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의 대부분이 부당 또는 불법 수단에 의하여 반출되었음으로 인하여 반환하라고 하나 이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로서 증거가 확실치 않으며 비록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 개인이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다.

둘째, 한국측은 문화재는 성질상 출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국제법 원칙과 관례는 없다.

따라서 당시 총독부의 일본관헌이 적법 반출한 문화재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셋째, 금번 일본은 한국과 장차에 있어서 문화협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국교 정상화 후에 자발적인 기증을 할 생각이다.³⁵⁾

이 견해서는 한국측의 문화재 반환이유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견해를 세 가지 조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곧 문화재 불법반출의 증거가 없음, 일본관헌은 문화재를 적법하게 반출한 것임, 문화재 반환은 반환이 아닌, 문화협조 곧 자발적인 기증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후 한국측은 반환문화재 목록을 일본측에 제시하였는데, 이는 논의시의 7개 항목을 재분류하여 역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문부성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1】 전문가회의에서의 사실 확인³⁶⁾

문화재 범주	세부내용(접수)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梁山夫婦塚 출토품(417) ● 경주路西里 215번지 고분 출토품(10) ● 경주皇菩里 제16호 고분 출토품(5) ● 평남대동군 대동강면 貞栢里 127, 227호분 출토품(30) ● 평남대동군 대동강면 石巖里 201호분 출토품(16) ● 평남대동군 대동강면 南井里 116호분 출토품(20) ● 평남대동군 대동강면 王肝墓 출토품(118)
통감 및 총독 등에 의하여 반출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고려자기 ●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한국 전적 ● 테라우찌(寺内) 전적, 서화, 불문화재 상 ● 통감부 장서 ● 가와이 고민(河合弘民) 장서(163)
일본 국유문화재 중 오른쪽 항에 속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소재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것 ●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것 ● 체신관계 문화재(278)
일본의 지정문화재 중 한국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谷井濟一, 小倉武之助, 市田次郎 소장품 ● 석조미술품(석조多羅菩薩좌상, 사자, 경주 석굴암 석불좌상) ● 석탑(경주불국사 다보탑 사자, 평남대동강 栗里 팔각오층석탑, 팔각 逸名부도, 오층석탑)

35) 「제5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36) 「제7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곧 조선총독부 반출 문화재, 통감 및 총독에 의해 반출된 문화재, 일본국유문화재와 지정문화재 중 한국문화재를 보다 구체적인 목록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반환 청구문화재 목록」은 1963년의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문화재 관계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일본측 : 석조미술품은 무엇인가.

한국측 : 동경박물관에 있는 “다라보살좌상(多羅菩薩坐像), 오오구라 집고관(大倉集古館)에 보관되어 있는 8각 5층 석탑과 5층 석탑이며, 팔각일명부도(八角逸名浮屠)는 동경네스 미술관(根津美術館) 마당에 있다. 경주 석굴암에 있었던 감불(龕佛) 2구와 불국사 다보탑 네모통이에 있는 석사자 2구는 현재 행방불명이나 일본에 건너온 흔적이 있다. 일본의 민간에는 더 많은 석탑, 부도, 석등, 석불 등이 있을 것으로 믿으나 여기서는 우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만을 열거한 것이다.

일본측 : 가와이 고민(河合弘民)의 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한국측 : 이미 전문가 회의에서 사실 확인을 한 바 있다. 가와이가 일본 헌병사령관의 소개로 헌병을 앞장세우고 강화도 사고의 자물쇠를 파괴하고 사고에 들어가서 책을 꺼낸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³⁷⁾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일본측은 때로 한국측에 문화재 반환의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큰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伊藤博文 컬렉션은 품목의 가치도 가치이지만 伊藤博文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측의 관심을 더 끄는 것인가”, “학술적 의미에서보다 정치적 의미에서 반환받는다라는 것이 귀측에서 볼 때는 더 비중이 큰 것은 아닌가”³⁸⁾ 하는 언급들인데, 문화재 반환협상의 최종단계에서 이 협상을 일종의 정치협상화 시키려는 의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4. 제7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과 조약체결

제7차 한일회담은 1964년 12월부터 1965년 6월까지 개최되었고, 문화재 반환협상도 마무리 된다. 이 시기의 문화재 반환협상은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일종의 정치협상에 가까웠다.³⁹⁾ 최종 협상전에 문교부는 외무부에 다음과 같은 최종요구 요강을 보낸다.

첫째, 1962년 2월 21일 아측에서 수교한 반환청구목록에 의하여 계속 추진할 것이며 그 중 국유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측에서도 반환대상이 되는 바이나, 인도(引渡)라는 용어하에 고려

37) 「제2차 문화재관계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 문화재 관계회의」.

38) 「제5차 문화재관계 회의록」, 앞의 회의록.

39) 「조부근은 제7차 한일회담기에도 문화재소위원회가 5차 동안 실시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시기는 1~2차가 1965년 4, 24~28일), 3차가 6월 11일, 4차가 6월 15일, 5차가 6월 18일이다(조부근, 앞의 책, 612-613쪽). 그렇지만, 정확한 원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본문 내용에서는 생략하였다.

가 될 것이다.

둘째, 사유물에 대하여서는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 명목을 기증(寄贈)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반환을 청구할 것은 다음과 같다.

- 小倉武之助 수집품
- 寺内正毅 수집 한적, 서화
- 일본내에 있어서의 지정된 한국문화재
- 석조물 중 석굴암의 龕佛 2구 및 소석탑⁴⁰⁾

곧 한국측이 일본측에 제시한 반환목록을 토대로 반환의 최종협의를 진행할 것인데, 반환의 용어는 “인도(引渡)”라고 하고, 일측이 제시하는 대로 기증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오구라(小倉武之助) 등의 수집품은 반드시 반환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문교부의 최종요강을 토대로 정부는 「문화재 문제에 관한 훈령(1965. 3.17)」을 통보하는데, 이 훈령은 한일의정서의 초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간의 문화에 관한 역사적인 깊은 이해와 대한민국이 그의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가지는 깊은 관심을 고려하고, 또한 양국간의 학술과 문화의 발전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도를 조속히 강구하기로 한다.

제2, 일본국 정부는 본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부속서에 명시되는 한국문화재를 대한민국정부에 인도(turn over) 하는 것으로 한다.⁴¹⁾

【중략】

일본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민간인 유지들의 협력을 얻어 자진 기증하는 방도로 주요한 문화재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바,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증을 장려한다는 뜻을 합의의사록 등에 규정하도록 교섭한다.⁴²⁾

이와 아울러서 반환대상품목도 이 훈령에 언급하는데, 그 원칙은 “우리측이 제시한 목록에 따라 반환 받을 것, 동경·경도 대학의 유물은 최종단계에서 철회할 것, 동경박물관 유물은 최대한 반환이 되도록 노력할 것, 전적은 최대한 반환되도록 하되 임진왜란 시에 탈거한 귀중도서는 복사제 공을 요구할 것, 체신문화재의 최대한 반환을 요구할 것, 오구라(小倉) 수집품 등 4개 품목은 끝까

40) 「문화재반환에 관한 문교부측의 최종요구요강」, 『제7차 한일회담(1964.12. 3~1965. 6. 22)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41) 일본측의 입장은 기증이고 한국측의 입장은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문교부의 요강에 따라 인도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42) 「문화재 문제에 관한 훈령 (1965. 3.17)」, 앞의 회의개최계획.

지 확보할 것”⁴³⁾ 등이다. 문화재 최종반환 협의 단계에서는 결국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문화재들은 꼭 반환받을 수 있게 협상에 임하라는 훈령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 가지 결정이 유보되었던 사항이 있다. 문화재 청구권에 관한 사항인데, 일본측의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청구권을 한일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 간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 청구권 문제관련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이 합의사항은 6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5항과 6항이 문화재 청구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다섯, 청구권의 해결 : 관계협정의 성립시에 존재하는 한일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상항 평화조약⁴⁴⁾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단, 한일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권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부터 생긴 관계에 의거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여섯, 한일간의 문화재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 증진에 관련하여 품목 기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일본국은 한국에 대하여 한국문화재를 인도한다.⁴⁵⁾

곧 청구권은 한일협정 성립시에 완전히 소멸하고, 문화재 반환 문제도 문화협력 증진과 관련한 협의와 문화재 인도 후에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결국 문화재 반환, 인도, 기증이라는 용어와 상관없이 문화재가 한국으로 온 후에는 그 이상의 문화재와 관련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문화재 청구권 관련 조약을 비롯한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제55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되었고, 한국은 1965년 8월 14일 제52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내었다. 그리고 1965년 12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하고, 1965년 12월 18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제협정”을 공포하기에 이른다.⁴⁶⁾ 이중에서 문화재 조약 제181호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 제182호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문화재 문제에 관한 훈령 (1965. 3.17)」, 앞의 회의개최계획.

44)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의미한다.

45) 「한일간의 청구권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 앞의 회의개최계획.

46) 공보부, 『官報』, 1965. 12.1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⁴⁷⁾ 〈하략〉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⁴⁸⁾

결국 위의 조약에 따르면, 문화재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이 아닌, 일본측이 시종일관 주장해 온 양국의 문화관계 증진이 목적이 되었고,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만의 인도가 정해졌으며, 문화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실 연구시 편의 제공 등은 수교된 나라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것으로 조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성질의 것이었다. 합의 의사록에서 민간문화재의 자발적 기증과 정부의 독려를 언급함으로써 민간문화재의 실질적인 반환을 포기하였다. 또한 “제1조의 문화관계 증진 협력”은 그 문구 때문에 일본문화의 대량유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우려마저 초래하였다.⁴⁹⁾ 그리고, 부속서에 따라서 반환된 문화재를 본다면 문화재 반환협상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부속서의 반환 문화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표 3】과 같다.

【표 3】한일협정 반환문화재 개략 목록표

문화재 종류	내 용
도자기, 고고자료, 석조미술품	○ 도자기 : 白磁托及盞 등 97점 ○ 고고자료 : 金製太環式耳飾 등 84종 334점 ○ 석조미술품 : 石造多羅菩薩像 1구, 石造獅子 2점 총 3점
도 서	愚伏先生文集 등 163부 852책
체신관계품목	湖南電報分局標札 등 20부 35점

47) 공보부, 『官報』, 1965, 12, 18.

48) 공보부, 『官報』, 1965, 12, 18.

49) 『韓日國交正常化에 따르는 文化關係 對備案』, 報告番號 (65) 第163號, 1965, 6, 28.

이는 도자기, 고고자료, 석조미술품, 도서, 체신관계물품 등을 모두 합쳐 1,321이 반환된 것이고,⁵⁰⁾ 반환문화재의 수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문화재 반환은 한국측이 처음에 제시했던 목록의 일부만이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끝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오구라(小倉) 수집품 등의 반환도 없었다. 결국, 위 목록표의 문화재는 1966년에 모두 반환되었고, 더 이상 일본측에 문화재 반환 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문화재 반환당시 들끓었던 비판의 여론은 당연한 결과였다. 부완혁은 한일협정 전체를 평가하면서, 문화재반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내용을 보면 양국정부는 양국민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는 추상적인 원칙을 내걸고,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인도한다고 말하여, 반환의무를 변질시켰고, 그들이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에 보유하는 중요한 문화재는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데 그침으로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또한 사유 문화재는 자발적인 기증을 권장할 것을 말함으로써 법률상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⁵¹⁾

곧 문화재를 반환이 아닌 인도, 그리고 문화협력 차원에서 돌려받게 됨으로써, 반환의무가 사실상 퇴색했으며, 학술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주요 문화재는 전혀 돌려주지 않고 단지 이용만 할 수 있게 함으로 반환받지 못한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한일협정의 문화재 반환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준 문화재만을 기증받은 것으로 사실상 법률적인 반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한일협정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김원룡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다. “반환문화재가 일본의 국유물로 축소되었고, 반환대신 인도라는 매우 흐릿하고 애매한 용어로 변질되었으며, 한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문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유물은 그 반환에서 제외되었다”는⁵²⁾ 등의 근거를 들면서 문화재 반환이 잘못 논의되었거나, 한국측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일회담시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문화재 반환이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느낀 후의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었다.

50) 이 유물의 수는 1958년 반환되었던 106점의 문화재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중에 경주고분 출토품 16점, 양산고분 출토품 일부, 통감 및 총독 등에 의하여 반출된 것 중에서, 이토의 고려자기 97점, 소네의 전적류, 일본 국유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중 한국문화재 중에서 체신관계문화재 35점, 석조다라보살상과 석사자상 2구 등이 포함된 것이다(文化財管理局, 앞의 참고집, 13-16쪽). 참고로 석조다라보살상은 지금은 강릉 한송사 석조보살좌상으로 불린다(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49쪽).

51) 夫完赫, 앞의 글, 72-73쪽.

52) 金元龍, 『文化財返還問題』, 『思想界』, 1965. 7, 緊急増刊號, 81쪽.

조약이 완결되고 문화재를 반환받는 과정에서는 일본측은 합의의사록을 무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에서 일본측 대표는 일본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1966년 4월에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일본측이 한 것이었다. 곧 “일본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므로 일본정부가 기증을 권장하기는 곤란하고, 권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⁵³⁾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개인 소장문화재의 반환독려까지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더 이상의 공식적인 문화재 반환은 더더욱 어려워진 셈이었다. 이러한 반환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측에 문화재가 불법반출되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각종 불법반출문화재 목록을 통해 일본측에 제출한 문화재들은 도록이나, 고적조사보고서 등에 의존한 것들이었다. 물론 그 목록에 있었던 유물들이 한국에서 출토되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이 유물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은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또한 6차, 7차의 문화재 반환협상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⁵⁴⁾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지식이 불충분했던 것, 문화재 반환협상에 진력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했던 것 등이 또 다른 이유이겠지만 일본측이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를 이룰테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공문서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유물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얼마의 돈을 보상금으로 받고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넘겼는데, 이 유물은 어떤 경로를 거쳐 일본의 어떤 곳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식의 증거가 필요했다.

결론적으로 1951년에서 1965년에 걸친 한일회담의 중 문화재 반환협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제1차부터 3차까지의 문화재 반환협상은 청구권 문제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청구권 문제 중 현물배상의 요구의 중요요소로서 문화재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것 정도가 의미 있다.

둘째, 제4에서 제6차의 한일회담기 때는 문화재 반환협상이 문화재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시기는 본격적으로 문화재 반환을 논의하는 시기인 동시에, 일본측의 의도적인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반환의 원칙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점검하면서 반환받을 문화재 목록을 작성한 시기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국유 문화재만을 원칙적으로 돌려주며,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기부한다는 뜻이고,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는 한국측의 반환문화재 목록 중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53) 「외무부 정세보고서」, 1966. 4. 18,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

54) <부록>을 참조할 것.

셋째, 제7차 한일회담과 조약체결의 시기는 논의된 문화재 협의가 최종 결정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반환되었던 때이다. 반환받은 문화재만 놓고 볼 때는 14년에 걸친 문화재 반환협상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측의 반환의 원칙으로 인해 반환받은 문화재의 양적, 질적인 기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외상)의 합의 사항으로 인해 한일협정 이후에 더 이상의 공식적인 문화재 반환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재 반환문제가 한일국교 정상화로 과정에서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부록】

한일회담 문화재 협상 시기 및 협상자

차수	기간	협상위원회	회의일	협상자	
1차	1951.10. 20. ~ 1952. 4. 21.	재산 및 청구권 위원회	좌기간	한국측	林松本, 洪璉基, 金泰東, 李相德, 韓奎永, 李一雨
				일본측	大野勝巳, 服部五郎, 光藤俊雄, 後宮虎郎, 重光晶, 上田克郎
2차	1953. 4. 15. ~ 1953. 7. 23.	재산 및 청구권 위원회	1차(5. 11), 2차(5. 19), 3차(6. 15)	한국측	張基榮(외교위원회위원), 洪璉基(법무부법 무국장), 李相德(한국은행외환부장), 韓奎永(주일대표부3등 서기관)
				일본측	石田次大(大藏省理財局長), 吉田信邦(大藏省총무과장), 上田克郎(大藏省외채과장), 重光晶(외부성조약국제3과장), 廣田積(외무성 아세아국 제2과장)
3차	1953. 10. 6. ~ 1953. 10. 21.	재산 및 청구권위원회	1차(10. 9), 2차(10. 15)	한국측	張曠根(외교위원회위원), 洪璉基(법무부법 무국장), 柳泰夏(주일대표부참사관), 李相德(한국은행외국부장), 張師弘(주일대표부2등서기관), 韓奎○(서기관)
				일본측	久保田貫一郎(외무성參與), 坂田(大藏省 理財局長), 上田克郎(大藏省외채과장), 木光(외무부 조약국제3과사무관)
4차	1958. 4. 15. ~ 1960. 4. 19.	문화재 소위원회	1차(6. 4), 2차(10. 4), 3차(10. 11), 4차(10. 18), 5차(10. 25), 6차(11. 1), 7차(11. 8), 8차(11. 15), 9차(11. 22), 10차(11.29), 11차(12. 6), 12차(12.13)	한국측	류태하, 최규하, 신필식, 황수영, 한기성, 이원호(1차) 등
				일본측	이타가키 오사무, 타카노 토키치, 스가무 라 키요시, 쓰치야 미나오(1차) 등

차수	기간	협상위원회	회의일	협상자	
5차	1960. 10. 25. ~ 1961. 5. 16.	문화재 소위원회	1차 (1960. 11. 11), 2차(11. 24)	한국측	엄요섭, 문철순, 엄영달, 이수우, 박상두, 진필식(1차) 등
				일본측	伊關佑二郎, 櫻井芳雄, 兼松武, 前田利一, 柳谷謙介, 井口成夫, 杉山千万樹, 池部健(1차) 등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	1960. 11. 14.	한국측	엄요섭
				일본측	伊關佑二郎
		전문가회의	1차(1961. 3. 7), 2차(5. 8)	한국측	이흥직, 황수영
				일본측	松下隆章(문화재보호위원회 미술공예과장), 齋藤忠(문화재보호위원회 조사관)
6차	1961. 10. 20. ~ 1964. 4. 5.	문화재 관계회의	1차(1963. 2. 13), 2차(2. 22), 3차(2. 27), 4차(3. 13), 5차(3. 20), 6차(4. 3)	한국측	이흥직, 문희철, 오채기
				일본측	■ 외무성측 : 하리가이(참사관), 야나기야(북동아세아과 사무관), 모리타(북동아세아과 사무관), 마다노(북동아세아과 사무관) ■ 문부성측 : 니시아(문화재보호위원회 사무국차장), 다끼모도(서무과장), 마쓰시다(미술공예과장), 사이토(기념물과 조사관), 미야노(서무과 사무관) ■ 동경박물관측 : 미아라 서무부장
		문화재 소위원회	1차 (1961. 10. 31), 2차(11. 7), 3차(11. 15), 4차(12. 5), 5차(12. 18), 6차(1962. 2. 16), 6차(2. 28)	한국측	이동환, 이흥직, 황수영, 정일영, 문철순, 김태지, 전성우(1차) 등
				일본측	이세끼(외무성 아세아국장), 우라베(외무참사관), 사쿠라이(대장성이재국외채과장), 마에다(외무성북동아과장), 야나기야(외무성북동아과사무관), 스기야마(외무성북동아과사무관), 마찌다(외무성북동아과사무관) (1차) 등
		전문가회의	1차 (1961. 11. 17), 2차(11. 21), 3차(11. 28), 4차(12. 6), 5차(12. 12), 6차(12. 21)	한국측	이흥직, 황수영, 박상두
				일본측	松下隆章(문화재보호위원회 미술공예과장), 齋藤忠(문화재보호위원회 조사관), 마에다(외무성북동아과장)
7차	1964. 12. 3. ~ 1965. 6. 22.	정치협상	좌기간	한국측	金東祚, 文哲淳, 方熙, 李圭星, 延河龜, 李垞浩, 李鳳榮, 金命年
				일본측	高杉普一, 牛場信彦, 平賀健太, 八木正男, 後宮虎郎, 西山昭, 藤崎萬里, 針谷正之, 廣瀬達夫, 吉岡英一, 宮地茂, 和田正明

참고 : 『제1~7차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앞의 책; 이도성 편, 앞의 책.

The background of the cover features decorative floral patterns. In the top right corner, there are large, detailed flowers with many petals and prominent stamens.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re are smaller, five-petaled flowers with dark centers. A single flower is also positioned in the middle right area. The overall design is minimalist and elegant, using a grayscale color scheme.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운동

후지타 타다요시(일본 중앙대학 연구원)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 운동

후지타 타다요시(일본 중앙대학 연구원)

들어가는 말

현재 501,230 명(이 중 354,503 명)의 동포가 일본에 살고 있다. 해방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과 그 후손들,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때 건너온 사람들, 1965년 이후 도입한 사람들, 최근 20세기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 등 특히 2세기에 걸쳐 일본에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1965년 한일 회담 당시 일본정부는 “25년 이후 재일한국인은 3세 혹은 4세이며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 한국의 풍속습관과 격절해서 완전히 일본사회의 동화해 있는 것도 예측이 된다. 그 시기가 오면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귀환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일동포는 여전히 고유한 존재로서 인식되며 스스로 풍속습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의 법적지위와 생활상황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그들의 상황이 개정돼 왔던 부분도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복잡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이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와 처우 개선 운동에 관한 쟁점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가 단순한 국적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관습도 포함되어 있는 보다 넓은 범위도 “법적지위” 문제로서 검토하기 위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고자 한다.

1.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해방 당시 약 210만 명의 동포가 일본에 살고 있었다. 미군정의 구체적 송환계획이 시작하기 전이었던 1946년3월까지도 그 중 약 140만 명이 이미 귀국해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에 남은 동포들에 대해 미군정과 일본정부는 일본 사법권에 따르도록 대응했다. 해방 이전에 내지 호적이 없었던 사람들, 즉 식민지 출신자들의 참정권을 정지시켰다. 1947년 5월에는 천황의 마지막 칙령으로 「외국인등록령(1952년 이후 외국인등록법)」이 내려진 결과 이후 재일동포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었다. 1947년에 시행된 일본국헌법은 법 아래에서의 평등과 사회적 차별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대상 범위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재일동포들은 제외되었다.

‘한일기본조약’ 이전에는 한국인 또는 한국 국적 보유자들은 「법률 제126호」의 범위 내의 체류자격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1952년4월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일본 국적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에서 일본정부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이 이관되었다. 완전히 일본정부 관리 아래로 두어진 재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1951년 11월 1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령」에 따라 「법률 제126호」가 제정되어 “별도로 법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결정될 때까지 체류자격 없이 계속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하여 잠정적인 조치가 강구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체류자격은 한일조약 체결 이후 겨우 영주권이 획득에 이르렀다. 「협정영주」가 부여되어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의 영주를 하나의 방침으로 내세워졌다. 이때부터 일본에서의 재일 한국인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영주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다만 이 법으로 인정된 체류자격은 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8일 이전부터 법이 시행된 날까지에 태어난 자들에 한해서만 유효했다.

한일조약 체결에 따라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이하 법적지위협정)」도 체결되어 재일한국인의 영주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영주자격과 같은 「협정영주」자격이 제정되었다. 영주권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이하와 같다.

(가) 한국 국민이며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체류 신청을 할 때까지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자

(나) (가)의 자손으로서 1971년 1월 16일까지 일본에서 태생하고 이후 자격 신청 때까지 계속 일본에 거주하며, 1966년 1월 17일부터 1971년 1월 16일 사이에 신청한 자

(다) 「협정영주」 허가를 받은 자의 자식으로서 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자

이 후 1970년까지에 34만2909 명이 협정영주를 획득했다.

이에 결락되었던 것은 3세대 이후의 자손들에 대한 처우다. 25년이 지나면 재검토한다는 것만 명기되어 있을 뿐, 이후 세대의 정주는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었다.

또한 이 조약은 “조선 국적”이 영주권 대상자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국적을 넘어서 일본에 사는 정주자로서의 재일동포 전체를 생각할 때 일본 정부는 영주권에 대해 여전히 한정적이고 차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¹⁾

세대 또한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대응이 정당화되어 왔던 상황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1년에 소위 「입관특례법」 시행의 결과 「협정영주」, 「특례영주」, 「법 제126호」의 거주권이 「특별영주자」로서 통일되어 구별 없이 영주자로 인정하였다. 세대에 따른 법적 지위에 관한 차이도 없어지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만 하면 「특별영주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외무부 정세보고서」, 1966. 4. 18,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

2. 체류자격 인정과 현실과의 괴리

이상 법적지위, 특히 영주권에 관한 지위의 변화를 확인해 왔다. 일견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는 해방 직후보다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1955년부터 외국인의 지문날인이 의무가 되고 1999년까지 실시되어 있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의 휴대, 제시의무 등을 강제하며 특히 재일동포와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적용되었다.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심문해서 휴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파출소에 연행하거나 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외국인등록제도에 관해서는 1980년대 지문날인에 대해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나타나서 약 1만 명 이상의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1999년 지문날인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거주권과 달리 정치, 교육, 취직, 사회보장 등 생활에 관한 권리들도 차별적인 처우를 감수하고 있었다. 참정권을 2015년 현재도 인정되어 있지 않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한국학교에 관해서는 일본교육법에 따라 소위 일반 학교로 인정되어 있지만 조선학교는 여전히 학교가 아니라 교육시설로 정의되는 각종학교의 위치로 멈춰 있고 공적보조금에 있어서도 일본 사립학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일본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민족교육은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關西(간사이) 지역의 학교에서 일어난 “본명으로 이름을 쓰고 부르는 운동”을 비롯한 민족교육의 실천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재일동포들은 취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해 왔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국적과 사회적 차별을 인해 1970년대 이전까지 대기업, 공무원 등 취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공주택에 입주도 1980년에 이르러 겨우 인정되었다. 일반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 거부를 당한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현재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하되 2001년 오사카시가 실시한 대해 32.1%가 “주택 또한 입주에 있어서 차별적인 처우를 느꼈다”고 대답했다. 이 해당자 중 재일동포는 31.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조사에서는 50% 이상이 “앞으로도 외국인에 대해 집을 빌려주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보험은 1960년대 한일조약 체결 이후 한국적 동포들은 가입이 인정되었지만 ‘조선“적 동포의 경우 1970년대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거주한 동포만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는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이라면 가입 대상이 되어 있다. 아동보조금에 있어서도 1982년까지

차별화된 상태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1982년까지 재일동포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상 확인한 것처럼 최근까지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와 실재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괴리가 있었다. 즉, 사회적인 권리들은 보장되어 있지 않았거나 여전히 충분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 부분에서는 상술한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에 관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일본사회의 뿌리에 있는 인식에 주목해 본다. 특히 일본사회의 관습법, 즉 사회의식 혹은 일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시선을 보여 주는 사례를 확인한다.

3. 히타치 취업에서의 차별 재판

1970년 12월 8일에 실시된 “히타치 취업차별 재판”은 재일 한국인과 일본사회에 대한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재일 한국인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재판으로, 이후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통해 재일 한국인의 차별 철폐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 박종석(1951-)은 당시 고등학교 졸업 후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시작으로 몇몇 회사를 전전하고 있었는데, 1970년 8월에 히타치 소프트웨어 戸塚도츠카 공장의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다. 취업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그는 평소부터 사용하고 있던 통명 “新井鐘司 [아라이 쇼지]”를 쓰고 본적지는 출생한 일본 주소를 기입했다. 박종석이 그렇게 서류를 쓴 이유는 본명이 외국인 등록증에만 쓰여 있지 자신에게도 익숙지 않고 본적지를 기입하면 입사 시험 자체를 못 볼 가능성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박종석은 입사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입사자 제출 서류 중에는 호적등본이 있었는데, 그는 외국인이라 호적등본이 없어 대신 외국인등록서를 제출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의 입사는 취소되었다. 담당자는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 측이 도리어 피해자입니다. 만약 박종석 씨께서 사실대로 서류를 작성하셨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입사는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하였던 것이다.

이 통지를 받고 1970년 12월 8일 박종석은 노동계약에 있어서의 권리 확인, 즉 해고의 무효를 비롯하여 미불 임금과 위자료를 요구해서 横浜요코하마 지방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이 재판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채용 취소가 노동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해고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점이다. 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둘째, 제출한 서류 등에 통명만 기재하고 본적지를 한국이 아니라 출생지를 기재한 것을 인한 해고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다. 두 번째 쟁점의 경우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재일 한국인들의 역사성과 그들이 일본사회에 겪는 차별의 실태가 드러남을 보여준 것이다.

히타치 쪽의 주장은 박종석이 허위의 기재를 했다는 연유로 입사규정에 위반했다며 장계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히타치가 해약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사회적 또한 사회통념 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히타치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또한 박종석의 능력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해약권의 타당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석을 해고한 이유가 국적에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러한 차별적 징계해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박종석의 “아라이”라는 통명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성명이므로 그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본명인 한국식 성명과 한국 본적지를 기재하였더라면 채용 자체가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재일 한국인이라는 연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해 통명과 일본에서의 출생지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점이 많다고 사법에서는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1974년6월19일 원고 박종석의 승소로 재판은 끝이 났다.

이 재판을 통해 세 가지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첫째, 재일 한국인은 국적을 이유로 취업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명을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국적보다는 사용하는 성명으로 외국인인지 아닌지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명을 통해 재일 한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본인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차별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차별부터 제도적 차별까지 일관되게 발생하여 왔다. 셋째, 이 당시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자로서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종석의 승소를 지지하는 운동이 재일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사회가 스스로 가해자인 사실을 인정하는 “시민운동”으로서 인식되었다.²⁾

4. 발음 문제와 관련한 재판 사례 : 최창화의 NHK 소송

최창화(1930-1995)는 후쿠오카의 인권 투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을 계속적으로 일본어식 표현을 한 것에 대해 1975년 10월3일 인권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에 제소했다. 최창화는 사죄와 사죄문을 방송 및 신문 게재를 비롯하여 이후 언론 기관의 한국식 성명 사용을 요구했다. 재판소에 제출된 제소 이유는 이하와 같다.

성명을 읽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격을 존중하는 기초가 된다. 본 국가와 일본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재일 한국인·조선인을 물건처럼 취급해왔다. 나는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이익에 따라 高山昌華 타가야마 쇼카(최창화의 창시개명으로 강요된 성명)가 되거나 “사이 쇼카”나 “사이 마사카”(일본식 발음)가 된다. 이 것은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이익에 따라 이들 나름대로 불리는 것에 불구할 뿐이다.

2) 「외무부 정세보고처리」, 1966. 4. 18, 「한일간의 문화제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제 인수」.

“이름을 바르게 불러 달라, 한민족의 언어 한글 발음 그대로 불러 달라”라는 주장은 인격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인간의 이름이 남의 이익이나 다른 민족의 이익에 따라 바뀌어 버린다면 그 것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격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조선과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더욱 더 이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³⁾

이에 대해 일본 방송협회 NHK(Nippon Hoso Kyokai)는 위법성의 무효를 주장했다. 외국인 성명을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언어적 문제는 논리나 이데올로기적 이유보다 사회적 관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창시개명 시행 등 일련의 불행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 원고가 피고에 의해 자신의 성명이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되어 사용 된 것에 대해 한국인·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심정도 이해된다.⁴⁾

재판부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최창화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가 국민들의 일반의 관습에 따라 한국인인 원고의 성명을 일본식 발음으로 방송하는 행위는 현대에 있어서 창시개명의 강요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한 객관적 측면으로 봐서도 한국인인 원고의 인격을 멸시하거나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위법성을 띄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⁵⁾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최고재판소에서의 항소가 기각되어 1988년 2월 16일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사회적 관습에서 악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민족적 자존심이 상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 차별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후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여러 이유로 일본국적과 본명으로서의 일본 이름을 가진 재일동포들이 민족 이름을 회복하고 귀화 행정을 해체하기 위한 운동도 일어났다.⁶⁾ 또한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직장에서

3) 「외무부 정세보고처리」, 1966. 4. 18,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

4) 「외무부 정세보고처리」, 1966. 4. 18,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

5) 「외무부 정세보고처리」, 1966. 4. 18,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

6) 「외무부 정세보고처리」, 1966. 4. 18,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

통명을 강용되었다는 이유로 김임만(金稔萬)이 일본 국가와 회사를 제소했다. 2015년 현재도 일본 시즈오카(靜岡)에서 화사사장한테서 통명 사용을 강제되었다는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이름에 관한 문제는 일본사회의 관습법, 즉 사회인식 또한 사람의 인식의 뿌리를 보여 주고 있다. 재일동포의 관습법에 관한 지위는 2015년 현재도 복잡하고 개선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습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름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나가는 말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는 국적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권리와 관습법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국적에 관한 법적지위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도 일본국적과 차별되어 있다. 관습법, 즉 사회인식 또한 일본인의 인식도 해방이후 혹은 50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 돼 일본에서의 재일동포들은 완전한 사회의 일원이라기보다 ‘외국인’으로 구별과 차별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까. 이번 글을 쓴 필자도 재일동포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차별을 만들어 온 일본사회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셈이다. 이와 동시에 필자는 현재 재일동포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일본사회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사회는 한 순간에 모드 변해지지 않고 그럴 수도 없으나 조금씩 좋은 방향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늘 차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차별의식, 행동, 정책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시선에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습법도 포함된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많지만 필자는 관습을 만들고 있는 자신의 인식부터 생각을 출발하고 싶다.



대일청구권자금과 포항제철의 건설

정 대 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대일청구권자금과 포항제철의 건설

정 대 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청구권자금으로 지은 포항제철”이라는 말에 대하여

포항제철의 초대회장으로 잘 알려진故박태준은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철강재가 그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어떤 국가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TV에서 경제발전과 관련한 자료화면을 내보낼 때 으레 용광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붉은 쇳물을 보여주는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철강’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한국 최초의 일관제철소인 ‘포항제철’이라는 단어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포항제철은 한국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인 셈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일국교정상화의 대가로 들어온 대일청구권자금의 상당 부분이 포항제철의 건설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대일청구권자금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6년인데 포항제철 설비가 착공된 것은 그보다 한참 지난 1970년이다. 대일청구권자금으로 포항제철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두 시점의 차이가 5년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본래 대일청구권자금이 도입된 것은 포항제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진행된 일이었고, 청구권자금으로 포항제철을 짓는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던 것이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 두 사안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항제철이 태어난 것이다. 올해로 37년째 함께 살고 계신 본 강사의 부모님이, 지금 와서 보니 잘 어울리는 부부처럼 보이는 것이지, 결혼식 당일에서야 처음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이 각자 자라온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였을 뿐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비유컨대 ‘한일수교’라는 외교적 문제와 ‘일



관제철소 건설'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서로 만나 '포항제철'이라는 자식을 낳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도 좋겠다.

2. 그 많던 대일청구권자금은 누가 다 썼을까?

1965년에 한일수교가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한일수교의 대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무상차관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 이상의 청구권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배상'이나 '보상' 등의 용어를 명시하지 못하여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었고, 그 액수도 썩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당장의 종자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학생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수교를 강행하였다.

이 때 들어온 총 5억 달러의 차관은 어떻게 도입되어서 다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3억 달러 이상"으로 명시된 민간차관은 민간 기업이 차관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정부 차원의 경제개발 정책을 이야기하는 오늘 강의에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총 5억 달러의 차관을 10년에 걸쳐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매년 정확히 얼마씩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여기서 사달이 났다. 이걸 두고 한국과 일본의 꿈꿨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 자금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고 싶어 했다. 청구권자금은 10년에 걸쳐 도입되기로 했지만, 한국 정부는 연간 도입액수를 최대한 늘려서 가급적이면 6년 정도 만에 5억 달러를 대부분 도입하고자 했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1년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일본 경제계가 저야 할 부담도 있었고, 당시 한국의 경제발전 상황으로 볼 때 유상차관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자금을 제공하려고 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본이 한국 시장에 도입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갑자기 뛸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가 컸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은근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결과는 한국 정부의 완패였다. 청구권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권한이었던 데다가 한국 정부는 청구권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가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박정희 정부는 경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왕성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박정희 정권이 청구권자금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청구권자금의 사용 내역에도 잘 드러난다.

실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의외로 신규 사업 투자가 적고 대신 원자재 도입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원자재는 섬유류, 기계류, 건설자재 등 기존 산업의 가동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의 효과가 즉각적이고 기술 도입에 따르는 기술이전 등의 복잡한 후속절차가 불필

요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제수지 개선에 즉각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청구권자금으로 통해 경제개발의 초석을 닦았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자금을 막상 들여오기는 했지만 이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육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1971년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청구권자금이 갑자기 특정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원자재 도입 비용이 줄어들고 법 절차도 무시한 채로 말이다. 그 사업은 바로 포항제철 건설이었다.

3. 제철소 짓기의 어려움

철강재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제선, 제강, 압연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제선 과정에서 철광석을 녹여 쇳물 혹은 선철(무쇠)을 만들고, 제강 과정에서는 불순물을 걸러내어 순도를 높이며, 마지막으로 압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 3가지 과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제철소를 일관제철소라고 한다. 일관제철소는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의 상징이자 높은 수입대체 효과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사업 중 하나였다. 한국도 포항제철이 지어지기 전에는 철강 생산시설도 대부분 노후하고 기술력이 떨어졌으며 규모도 영세했다.

이 때문에 이미 이승만 정권기부터 일관제철소 건설이 추진되었고, 박정희 정권기에 들어서도 여러 차례 계획이 수립되었다. 일관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는 번번이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거대한 시설과 막대한 자금을 요구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건설기간이 길고 경기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시장 규모도 성숙하지 못하였고 장기적인 개발계획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에게 일관제철소 건설은 위험부담이 너무 큰 사업이라고 보았다. 터키,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시도된 제철소 건설이 하나같이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염려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로 볼 때 제철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수요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철강수요는 최소 28만 톤에서 최대 114만 톤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평가대로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필요성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이러한 평가를 크게 넘어서고 있었다. 한국의 철강재 수요는 1968년에 이미 100만 톤을 돌파했고 1973년에는 300만 톤을 상회했다. 이와 같은 수요의 급격한 성장은 일관제철소 건설을 계속 주장해왔던 국내 관계자들의 예상마저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한편 철강 산업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방위산업의 육성과도 긴밀히 연결된 문제였다.

60년대 말부터 잇따라 터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계렬라 침투, 주한 미 7사단의 철수 등 일련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박정희 정권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은 68년 4월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한편 온산, 창원, 거제도, 구미 등지에 각종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수산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라는 측면도 제철소 건설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 196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을 능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철강 산업은 남한을 압도하였다. 1965년 현재 북한의 철강 생산능력은 제선 147만 톤, 제강 213만 톤, 압연 159만 톤으로 모든 부문에서 남한을 능가하였다. 특히 1958년 곶이포 제철소의 재가동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 높이 솟은 고로와 터져 나오는 쇳물의 이미지는 실제 경제지표와는 무관하게 개발도상국의 자기 성장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이었다.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본 확보를 위해 부심하던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코퍼스(Koppers)사를 주축으로 5개국 8개 회사로 구성된 국제제철차관단(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ion, KISA)을 통해 차관을 유치하는 해법을 찾았다. 1967년 6월 30일에는 포항을 부지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9월 11일 사업추진의 모체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대한중석)을 선정하였다. 대한중석은 1969년 현재 자본금 80억원, 매출 39억 원의 대형 기업으로 정부지분도 48.67%에 달해 정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존재였다. 사장으로 있던 박태준이 와세다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1968년 4월 1일 포항제철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그런데 또 사달이 났다. 1969년 미국 수출입은행이 갑자기 차관 제공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내자동원능력도 불투명하고 축적된 기술도 없다는 것이 차관 거부 이유였다. 전체 차관 계획액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미국의 차관이 막히면서 다른 국가의 차관도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차관도입이 좌절된 것은 차관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KISA의 책임이 가장 컸지만, 다국적 컨소시엄에 불과했던 KISA에게 차관 도입과 기술 지원문제를 거의 일임한 한국 정부도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이때의 실패가 이전의 다른 실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점이었다. 부지 선정이 끝나고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졌으며 사업체까지 설립된 상황에서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모든 자본은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한국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정희는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 박충훈 경제기획원장을 경질하고 김학렬을 신임 경제기획원장으로 임명하고 종합제철 건설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누가 봐도 종합제철소 사업은 이미 었어진 물이었다.

4. 드디어 세워진 포항제철

박태준의 회고에 따르면, 박태준이 청구권자금을 포항제철 건설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1969년 3월 KISA와의 접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도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청구권자금을 포항제철 건설자금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는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승낙을 받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일본정부가 사업타당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철강회사들의 협조각서를 준비하는 한편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로비활동으로 일본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일본 정계의 모호한 입장과는 달리 일본 재계의 입장이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이유는 일단 포항제철 건설에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데에 있다. 제철소의 건설대금이 청구권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금이 일본정계에 미치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제공국가도 일본으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재계에게 조속한 포항제철 건설 참여는 관련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미 1960년대 후반 몇몇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이게 된 일본 재계로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급성장하고 있었던 한국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흥시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술이전은 일본과 경쟁할 가능성이 낮은 하급기술을 위주로 이뤄졌다.

자금 문제가 해결되자 한국 내의 절차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청구권자금의 포항제철 투입은 곧장 제6차년도(1971년) 계획안에 반영되어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었다. 조달청과 사절단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기존의 청구권자금 도입 규정을 무시하고 포항제철 건설에 관련된 건은 구매계약 체결과 내용의 변경까지 포항제철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었다. 드디어 1970년 4월 1일 포항에서 포항종합제철 1기 설비가 착공되어 73년 7월 3일에 완공되었다.

포항제철의 건설은 즉각적인 국내수요의 충족과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철강재 수요는 1962년 26만 5000톤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난 1966년에는 52만톤, 1971년 177만



포항제철 착공식. 좌로부터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경제기획원장. (1970.4.1.)



첫 쇳물이 나오던 순간. (1973.6.9)

톤, 1972년 220만 2800톤으로 1973년 329만 2000톤으로,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는데 포항제철이 가동하면서 1977년에 수요의 99.2%인 234만톤을 공급하였고 1962년에 46.5%, 1967년에 37.8%였던 철강재 수입 의존도는 1977년에는 16.1%까지 떨어졌다.


포항제철의 건설은 단순히 철강재 생산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한국 철강 산업 구조는 압연시설 위주여서 제선과 제강

의 결과물인 선철과 강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안정적인 수급도 어려웠다. 그러나 일관제철소인 포항제철이 완공되면서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일관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어 광산지분 참여나 원자재 장기 계약 등으로 원료 가격 상승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철강재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즉 포항제철을 통해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미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셈이었다.

5. 나가는 말 : 포항제철과 경제발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상으로 대일청구권자금을 통해 포항제철이 설립 건설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러 차례 좌절된 제철소 건설 시도가 대일청구권자금을 통해 비로소 성사되는 과정은 (거짓말 살짝 보태서) 어지간한 정치드라마 못지 않게 극적이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면면도 훌륭해보인다. 포항제철이 생산한 철강재를 '쌀' 삼아서 이룩된 것임을 생각하면 한 산업화의 결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 한켠에 뿌듯함 비슷한 것도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구권자금을 통해 포항제철이 지어졌고, 그 청구권자금은 각 국민 개개인의 민간청구권을 포기한 댓가라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의 가장 밑바닥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설움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요집회나 하시마섬 이야기 같은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잠시 뒤로 미뤄놓았던, 하지만 언젠가는 꼭 풀어내야 하는 숙제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계속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쟁점들

박 정 애(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등장과 새로운 쟁점들

박 정 애(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1. 일본 군대의 ‘위안부’ 여성들

역사는 전쟁이 주는 정치경제적 이해득실만 기록했고, ‘국익’을 위한 전쟁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웠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성의 성을 활용했다. 일본에게 땅을 뺏긴 한반도에서는 민족차별이 횡행했고, 계급차별과 젠더차별 또한 얼키설키 깊어졌다. 새로운 땅을 점령할 때마다 일본군은 점령지의 여성을 강간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정치적 손실이 생기자 군대에게 안정적, 지속적으로 성을 ‘제공’하는 ‘위안부’ 제도를 생각해냈다.

전쟁 시기 일본군만이 사용했다는 ‘위안부’라는 말은, ‘위안부’의 존재를 둘러싼 일본군의 촌촌한 시선과 손길을 보여준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15년간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병사들에게 여성의 성을 제공할 시스템을 마련했고,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불렀다. 병사들을 위해 존재하며, 병사들에게 ‘위안’을 제공하여 전쟁을 뒷받침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리하여 ‘위안부’로부터 ‘위안’을 받은 병사들이 전쟁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기를 바랐다.

2. 1931-1945년 일본의 침략전쟁과 위안소 설치

일본군 위안소는 오랜 기간, 넓은 지역에 걸쳐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전장을 넓혀가며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위안소가 생겼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전쟁의 상황이 달랐던 만큼 위안소 또한 형태와 성격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1) 1932년 상하이 공격 : 최초의 위안소 설치

일본군의 요청으로 위안소가 처음 개설된 것은 일본군의 중국 침략 과정에서였다. 1931년 9월 중국 동북지역을 공격하고 이른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은 다음해인 1932년 1월 상하이로 전선을 넓혀갔다. 이때 일본 해군에서 최초로 위안소를 열었고 곧이어 육군에서도 ‘위안부단’을 조직하였다. 그 동기는 일본군이 중국인 여성을 강간하여 중국인의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병사들이 성병에 걸려 병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전쟁시대에 위안부 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나는 위안부안의 창설자이다. 쇼와 7년(1932년) 상해사변 때에 2,3건의 강간죄가 발생해서 파견군 참모부장인 나는 동지(同地) 해군을 모방하여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요청하여 위안부단을 데려왔다(『岡村寧次大将資料第一 戦場回想編』1970年 302-303쪽)

상하이 침략 당시 상하이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오카무라 야스지의 회상이다. 그는 상하이 주둔 해군을 모방하여 육군에 ‘위안부’를 처음 두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2) 1937년 난징대학살 : 위안소 제도의 체계화

1937년 7월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하고, 12월에는 난징을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민간인을 학살하고 대규모의 강간을 저질렀다. 바로 ‘난징대학살’ 사건이다. 이러한 만행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자 일본군은 병사를 달래고 양민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위안소 제도를 체계화했다.

더 빨리, 더 많이 위안소를 개설할 필요가 생기면서 일본군의 개입도 더욱 노골화되어갔다. 일본군은 기존의 접객업소(유곽이나 요리옥 등) 가운데 적당한 곳을 골라 위안소로 지정하거나, 민간 건물(대부호 저택이나 여관 등 방이 많은 건물)을 뺏어 위안소로 사용하는 한편, 직접 위안소를 짓거나 군대 내의 매점을 위안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38년] 1월 13일 오늘 급히 주보 담당의 명을 받아 주보에 갔다. 전쟁터의 군대는 재미있는 곳이다. 여급만이 있는 주보니까. 팔 물건은 하나뿐이다. 여자를 사려는 군인들이 몰려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바빴다(田中常雄編, 『荻島靜夫陣中日記』『追憶の視線』下卷, 1989, 102쪽).

제101연대 제2대대가 중국 상하이에 주둔했을 당시 오기시마(荻島) 하사의 중군 일지 내용이다. 주보(酒保), 곧 군대의 매점(PX)을 위안소로 사용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3) 1941년 태평양전쟁 : 위안소의 확대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싱가포르, 필리핀, 버마, 인도네시아 등을 공격했다. 동시에 일본군이 점령해간 지역에는 차례로 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군위안소 설립을 계획했다. 개전 직전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를 시찰했던 육군성 소속 군의관은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병사의 강간 등을 금하고 ‘촌장에게 할당하여’ 위안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金原節三, 『陸軍省業務日誌摘録』, 1941년 7월 16일).

이에 따라 1942년 9월 육군성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장교이하의 위안시설을 다음과 같이 둔다.

북지 100개, 중지 140개, 남지 40개, 남방 100개, 남해 10개, 카라후토 10개, 모두 400개소

(金原節三, 「陸軍省業務日誌摘録」, 1942년 9월 3일).

위안소 설립은 일본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이었음을 엿보게 한다.

3. 동원명령과 ‘위안부’가 된 여성들

일본군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로 하여 ‘위안부’ 동원방식에 변화를 보였다. 그 이전까지는 동원명령은 내리되 동원과정에서는 일본군의 존재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층층이 얹힌 브로커 매커니즘을 활용했으며, 관계지방의 헌병이나 경찰 등의 협조를 지시했다. 집집의 남편이나 아들을 군인으로 동원해 간 상황에서 군인을 위한 ‘위안부’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군인 가족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한 공창 및 인신매매 반대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1938년 3월 일본 육군성은 통첩을 내어 “앞으로 이들[‘위안부’]을 모집할 때는 파견군 쪽에서 통제하고 이를 담당할 인물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하며, 이것을 실시할 때는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군의 위신 유지와 사회문제 면에서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기를 바라면서 이 통지를 보낸다(陸軍省副官通牒, 「軍慰安所從業婦等募集に關する件」 1938. 3. 4.)”고 하였다. 일본군 스스로도 ‘위안부’ 동원을 ‘군의 위신 유지와 사회문제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뒤에 일본군은 ‘군증명서’를 발급하여 ‘위안부’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했다(外務大臣, 「南洋方面占領地に対し慰安婦渡航方の件」 1942. 1. 14.). ‘위안부’의 이동지역이 늘어나고 전황이 급박해진 상황 속에서 ‘위안부’의 동원방식을 좀더 직접적인 것으로 바꿨던 것이다.

1942년 당시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하여 버마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인 업자는 1944년에 포로로 잡힌 후 연합군의 심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시 조선에 소재했던 일본군 육군사령부(조선군사령부)의 요구에 응해, 한국인 여성 22명을 인신매매했으며 ‘위안부’를 버마로 데리고 오는 데 필요한 모든 원조는 조선군사령부가 일본 육군의 모든 사령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이다(「ATIS No.120(1): 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1945. 11. 15.).

반면 이 업자 밑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성들은 제대로 내용도 모른 채 조선에서 끌려왔다고 대답을 했다. 모집 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이며 일은 쉽다고 유혹을 했다고 한다. 새로운 땅인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대부분 빈곤에 허덕이면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모집업자의 감언이설은 솔깃한 제안이었다. 업자들은 몇 백원의 선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가족들의 빚을 고민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그 돈은 큰 유혹이 되었다. ‘서비스 일’이라는 말에 여성들은 병원에 있는 부상자에게 봉대를 묶어주는 등 일반적으로 병사들을 편안하게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49.”, 1944. 10.).

그러나 업자를 따라 도착한 버마에서 이 여성을 맞이한 곳은 위안소였다. 동원되고, 이동되고, ‘위안부’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여성들은 업자와 일본군 사이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전쟁이 벌어지는 낯선 지역에서 빚이 된 선금에 묶여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4. 위안소 이용규칙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위안소는 일본군 병참 시설의 일부였다.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방법과 운영요령, 이용규칙 등을 매뉴얼로 만들었고, ‘위안부’의 동원, 이동, 생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했다.

이런 일이란 게 군대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테지만, 전쟁터에 가면 빼집이… 조달되는 여자의 내구성이라든가 소모 정도, 게다가 어디 여자가 좋다는 등 나쁘다는 등 말하고는 했지요. 거적을 들치고 그곳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의 ‘대기시간’이 장교는 몇 분, 하사관은 몇 분, 병사는 몇 분…하는 것까지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요금도 등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빼집 설치요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경리학교에서 배웠습니다(桜田茂·鹿内信隆, 『いま明かす戦後秘史』上巻, サンケイ出版, 1983).

육군경리학교를 나온 시카나이가 재학시절을 떠올리면서 한 말이다. 여기에서 ‘빼집’은 ‘위안소’를 가리킨다. ‘빼’는 중국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인데, 병사들 사이에서 ‘위안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위안부’를 인격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병사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시카나이의 발언에서 일본군이 육군경리학교에서 경리장교가 되는 사람에게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까지 교육을 시켰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안소 이용에 관한 규정 중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38년 1월 중국 상하이에 개설됐던 육군위안소 벽에 걸려있던 〈위안소 규정〉 중 일부이다. 상하이파견군 병참사령부의 명령으로 되어 있었다(麻生徹男, 『上海より上海へ』石風社, 1993.).

1. 본 위안소는 육군 군인, 군속(軍屬)(군부(軍夫) 제외)만이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하는 사람은 위안소 외출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입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를 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에 입장권과 콘돔 한 개를 받아야 한다.
1. 입장권의 요금은 하사관, 병사, 군속은 모두 2엔이다.
1.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은 지정된 방에 들어가 30분 동안만 머물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를 어지럽힌 사람은 강제로 퇴실시킨다.

군인, 군속 등 군 관계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계급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안소 설치의 주요 목적이 병사의 성병 예방이었던 것인 만큼 콘돔 사용은 병사의 의무사항이었다. 당시에는 ‘삿쿠(サック)’라는 일본말로 널리 알려졌으며, 상하이 육군위안소에서 쓰인 콘돔의 이름은 ‘돌격1번’이었다. 전쟁승리를 위한다는 위안소의 설치목적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다.

〈위안소 규정〉에는 군기 위반자의 강제 퇴실 규정이 있었고, 위안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술 취한 자의 입실 및 음주를 금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위안소 내에서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기 위반’에 관한 특정한 규정은 그만큼 ‘군기 위반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중국 중부 지방에 파견됐던 헌병대가 작성한 군인 군속의 비행표에는 병사들이 술을 먹고 위안소에서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中支那派遣憲兵隊司令部, 『1942年 2月 軍人軍屬 非行票』, 1942. 2.).

2월 7일. 술을 먹고 몹시 취한 상태에서 2시 30분 경에 위안소에 갔음. 자기의 지갑과 시계를 전우에게 맡겨 둔 것을 잊어버리고 ‘위안부’가 몰래 훔쳐갔다고 오인해서 칼을 빼어 들고 그녀와 음주를 혼내고 따짐

2월 15일. 외출 때에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위안소에 갔음. ‘위안부’를 때리고 칼을 빼서 간판을 부수려고 했음

병사들의 음주 및 폭행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병사들은 술에 취했고 칼을 빼어 들고 위협했으며 ‘위안부’를 때렸다. 어느 ‘위안부’에게 그것은 평생 헤어나오기 힘든 악몽의 씨앗이었다.

사람 취급을 안 해, 말 못한다. 장교놈들이 술을 치먹고 와 갖고 그 긴 칼 있지. 질질 끌고 다닌다. 자기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목이라도 쳐서 죽이겠더라고, 그 놈들을. 아휴 아휴----- 그 말을 어디다 다-- (정대협,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전쟁과 여성인권, 2004.)

폭행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위안소 생활 자체는 ‘위안부’들이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난징위안소에서 1년간 ‘위안부’ 생활을 했다가 1939년에 돌아온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하루에 70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던 관계로 몸에 무리가 생기고 식욕감퇴, 복통, 요통이 생겨 몸이 쇠약해지고 몸져” 누는 지경까지 갔으며, 위안부는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해서 정말 위험함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황군위안소의 창기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京畿道警察部長, 1939, 「京高秘第2303號」, 9, 13.).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새로운 역사를 쓰다.

1945년 8월, 일본군이 항복하고 전쟁은 끝났지만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위안부’였던 많은 여성들이 마을이나 가족의 비난을 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와서 숨 죽이고 산다 하더라도 ‘정조를 잃었다’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결혼을 했든 하지 못했든 생계를 잇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으며, 과거 ‘위안부’ 경험이 학대와 모욕을 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침묵을 선택해야 했다. 그 사이 과거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은 채 새로운 상처가 쌓여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50여 년이 흐른 뒤였다. 1988년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서 성매매 관광을 하는 문제(일명 기생관광)를 논의하는 한 세미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매매 관광의 역사적 뿌리이며, 어느 세력에 의한 정치침탈, 경제침탈, 군사침탈이 일어나는 곳에서 언제든 일어나는 오늘날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여성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현재에도 계속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공유했으며, 연구모임을 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사죄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일 정부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여성단체들은 1990년 11월, 36개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했다. ‘정신대’는 일제가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했던 ‘근로정신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엄격히 따지자면 일본군 ‘위안부’와는 의미가 달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신대’를 ‘위안부’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당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정신대’=‘위안부’라는 오해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이 ‘근로동원’이나 ‘공출’, ‘취업’의 외피를 쓰고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은밀한 성격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하나의 핑계가 되었다. 여성단체의 진상 규명 요구에 일본 정부는 정부나 군이 ‘위안소’ 설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렸다. 한국 정부 또한 진상 규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문제가 다시 잊힐 것만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당시 당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고 끔찍해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살아왔지만 …… 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일본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학순 할머니의 등장으로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 생존자들도 한 명, 두 명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존자의 등장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에서도 일본 정부는 “정부와 군의 관여는 없었다”는 종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1992년 1월 8일 수요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 하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번째 수요 시위가 열렸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비롯하여 여성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모여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촉구했다. 사죄와 배상, 진상 규명과 역사교육은 2012년 현재 1,000회가 넘도록 이어져 온 수요 시위의 중심 요구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를 입증하는 문헌자료가 발견되었고 1993년에는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생활지원을 시작했으며, 일본 정부는 ‘국민기금’이라는 민간기구를 만들어 배상이 아닌 ‘위로금’ 지급을 시도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일본 국회의 의결을 거친 공식 사죄와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금 지급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지만,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대답은 없다. 오히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는 등, ‘위안부’ 문제 인식은 2000년대 들어와 후퇴하고 있는 중이다.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의 용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커밍아웃(coming out)’ 행위에 비유되고는 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각오해야 하듯이, ‘위안부’ 피해 여성 또한 자신의 피해를 밝히기까지 많은 것을 고민하고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힌 그녀들의 ‘용기’에 주목해야 한다. 그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몸과 마음에 각인된 고통에 대해 말하지 못했으며, ‘더러운 몸, 수치스러운 몸’이라는 주위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성폭력에 맞서 싸운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가 50여년 동안 쌓인 뒤에야 그녀들은 비로소 그 고통이 ‘성폭력 피해’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때, 그녀들의 용기는 더욱더 커질 수 있었다.

‘위안부’ 생존자들은 전쟁 중의 ‘위안소’ 생활에서 살아남고, 전쟁 후의 세상의 소외에서 살아남아 ‘위안부’ 여성들이 겪은 일을 역사의 장으로 끌어올리고야 말았다. 생존자들은 먼저 죽어간 동

료들에게 책임감을 느꼈으며, 전쟁이나 무력갈등 하의 지구촌 어딘가에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을 하였다.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용기가 더욱더 필요함을 알았다.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평온한 느낌을 주는 ‘위안’이라는 호칭과 달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생산하고 체계화한 것이었다. 20세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 성노예 사건으로 기록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전쟁승리와 국익옹호를 명분으로 국가가 직접 성노예 제도를 고안하고 관리했다는 점에 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던 전시 성노예제도는 여성에 대한 국가의 최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안소’가 당시 일본에 의해 허가된 공간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곳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들이 은폐되었으며, 가해자는 가해책임을 회피하였다. ‘위안부’ 생존자들의 용기는 ‘위안소’의 기억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위안소’제도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낳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전쟁의 반인간적 속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미래를 향한 역사교육이 이 모든 비극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리라 강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녀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며, 어쩌면 앞으로 우리들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용기에 보태는 우리들의 용기는 바로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5 제17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한일수교 50년, 그 빛과 그림자

발 행 일 2015. 9. 18

발 행 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우성

발 행 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032.440.6750

<http://museum.incheon.go.kr>

북디자인 성웅디자인

